

여성·평화·안보 전문가 담론마당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여성평화 전략 모색

때 : 2020. 12. 1. (화) 오후 3시 - 7시

곳 : 서머셋팰리스 서울

주최 : K-1325 네트워크, 대화문화아카데미, 동아시아평화회의

후원 :  **재단법인** 여해와 함께  **서울특별시**  
Kang Won Yong Foundation

- 프로그램 -

“한반도 분단극복을 위한 여성평화 전략 모색”		
15:00	등록	
15:10	개회인사	이삼열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축사	이홍구(동아시아평화회의 좌장) 이정옥(여성가족부 장관)
15:30	프로그램 1부: “COVID-19 이후 분단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	좌장 : 이현숙(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발제 : 고유환(통일연구원 원장) 토론 : 도지인(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HK교수) 이태호(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16:50	휴식	
17:00	프로그램 2부: “COVID-19 이후 한반도 여성평화운동 전략”	좌장 : 장필화(한국여성재단 이사장) 발제 : 김정수(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토론 : • 유엔안보리결의 1325 채택의 의미 조영숙(양성평등 대사/한국여성단체연합국제연대센터 소장) • 평화과정 여성 참여 확대와 평화역량 강화 이정아(경기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교육 조정아(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 과제 최수산나(한국YWCA연합회 중점운동 총괄부장)
18:30	프로그램 3부: 전체 토론	
19:00	* 행사 이후 저녁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 <개회인사>

### 여성 평화 담론마당을 열며

평화운동은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고 함께 해야 하는 운동이지만, 여성평화운동이 특별히 필요하고 중요한 공헌을 하게 되는 까닭은 여성 특유의 생명 의식과 풍부한 감성이 인간의 평화본성의 핵심이며, 여성운동이 항상 시대적 평화운동을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오스트리아의 베르타 폰 수트너(Berta von Suttner) 여사나 미국의 제인 아담스(Jane Adams) 여사가 주도해온 서구의 평화운동 역사를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평화운동이 남성들보다 더욱 철저하게 전개된 것은 전쟁과 폭력의 희생과 고통이 여성들에게 더욱 처절하게 나타나며 무엇과 생명을 아끼는 정신이 여성에게 더욱 강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평화사상가 올리브 슈라이너(Olive Schreiner) 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더 생명의 보호와 유지에 관심이 많다. 사람의 몸뚱아리를 없애 버린다는 것을 여성들은 생각할 수 없다. 인간의 몸은 곧 여성들의 작품이기 때문이다.”는 말입니다.

20년전 유엔 안보리에서 1325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세계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평화운동에 나서도록 촉구한 근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1325 결의문 채택 20주년을 맞아 한국의 대표적 여성운동단체들이 1325 네트워크를 결성하게 된 것은 대단히 의미 깊은 역사가 되리라 믿으며 아낌없는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포럼을 이어온 대화문화아카데미와 동아시아평화회의가 1325 네트워크 준비위원회와 함께 오늘의 담론마당을 열게 된 것을 큰 영광과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6.25 남북전쟁이 70년이 넘도록 종전되지 않고 적대적 분단체제가 고착되어가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분단을 극복하고 남북이 상생하는 길과 지혜를 찾으며, 여성평화운동의 과제와 전략을 모색하는 귀중한 마당이 되길 바랍니다.

코로나 사태로 불편해진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온 오프라인으로 참여해주신 여성운동가 여러분들께, 특별히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고유환 교수님, 김정수 박사님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일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 이삼열

## 기조발제 COVID-19 이후 분단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

고유환(통일연구원장)

### 1. 하노이 노딜의 충격과 그 후유증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본격화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정체되다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계기로 가동을 멈췄다. 문재인 정부가 평화우선의 한반도정책을 추진하면서 3번의 남북정상회담, 2번의 북미정상회담, 1번의 남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급진전할 것 같았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난관에 봉착한 것은 무엇보다 하노이 ‘노딜’에서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협상에 대한 남북미 각각의 국내 구조의 반발, 미중 간의 패권경쟁, 코로나19 팬데믹 등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이 6·15 남북공동선언 채택 20주년 다음날인 지난 6월 16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도 교착국면에 빠졌다. 북한은 6월 8일 대남사업부서들의 사업총화회의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했다고 선언했다. 북한이 “적은 역시 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화해협력·공존공영을 합의했던 6·15 남북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써 남북관계는 전면적으로 단절됐다.

북한이 대남사업을 대적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한 것은 6·15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며, 북한 선대지도자들의 유혼을 부정하는 행위다. 하노이 노딜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남측으로 돌리려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사이의 신뢰는 크게 손상됐다. 아마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남·대미 사업에 대한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로의 책임분산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수’로 남북관계 복원에 더 많은 공력(功力)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역사를 돌이켜 보면 합의를 만들기까지는 어렵고 합의 직후부터 곧바로 사문화의 길을 걸었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발사에 맞서 2016년 개성공단을 폐쇄한 이후 지금까지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이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관계복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2. 생명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한반도 생명·안전공동체론을 제시하고 비전통안보(인간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과 북이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상황에 남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희망하면서,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생명공동체 회복을 위한 남북협력이다.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교착국면에 빠져 있지만 생명과 안전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들은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보건 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 협력,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 철도연결 등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실천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노딜로 평화체제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교착국면에 빠졌지만 생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협력 사업들은 본격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통일, 평화, 비핵 같은 거대담론보다는 남북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편안한 일상을 강조한 것은 일종의 ‘작은 발걸음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협력을 통한 생명과 안전을 강조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이 분단체제의 대립갈등에 따른 피곤한 일상으로 벗어나 평화를 누리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노이 노딜로 평화협력공동체와 경제협력공동체를 형성하여 ‘신한반도체제’를 만들려는 문재인 정부의 평화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계기로 남북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했다. 코로나사태를 계기로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못지않게 생명공동체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북한 핵문제보다 코로나19를 더 무서운 위협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제재와 셀프봉쇄에 따른 경제위기를 코로나19보다 더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할지도 모른다. 북한은 지난 6월 당 정치국회의에서 ‘평양시민의 생활보장과 관련한 의제’를 다룰 정도로 경제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평화-비핵 교환(안보-안보 교환)협상과 같은 정치·군사문제는 ‘고위정치(high politics)’ 영역이고, 경제협력과 인도협력은 ‘하위정치(low politics)’영역이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 문재인 정부가 인도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신현실주의자들이 강조하는 고위정치 영역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신자유주의자들이 강조하는 하위정치 영역을 활성화하여 고위정치 영역의 진전을 이뤄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정권 교체와 코로나19 팬데믹 지속으로 평화-비핵 교환협상을 본격화할 수 없는 여건을 감안해서 당분간 생명공동체론에 입각해서 인도주의 협력에 주력하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모색해 보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군사안보문제는 적우가 분명하지만 코로나19와 같은 인간안보문제는 적우가 따로 없다. 코로나19는 인류공동의 적이다. 북한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생명공동체 형성을 위한 우리의 협력제안을 수용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다.

### 3.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북핵협상 전망

제46대 미국 대통령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Joe Biden) 후보가 당선됐다. 우리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미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이기도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미국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과 함께 유사시 한반도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핵심 당사자이다.

미국 대통령이 어떤 한반도정책을 펼치는가에 따라 한반도 운명도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그동안 상당기간 한국정부와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엇박자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했고 북핵은 고도화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경제문제가 대선 쟁점으로 부각하면서 북한 핵문제가 관심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북핵문제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세계적인 핵확산을 불러올 수 있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하향식)의 개인외교를 재검토하고 보텀업(bottom-up·상향식) 실무협상을 진행하여 성과가 기대될 때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융합하여 북미 양자 또는 다자협상을 단계별로 추진할 것이다.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화성-15형 발사성공 이후 ‘국가핵무력완성’을 선언한 상태라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 정책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대북제재 유지 의사를 밝혔고 민주당도 제재의 효과를 신뢰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는 집권 정당과 관계없이 북한의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대북제재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는 전통적으로 대통령보다 제재 부과에 긍정적이고, 대북제재에 보다 적극적인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와 같이 바이든 행정부는 큰 틀에서 경제제재를 통해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재효과론'을 계승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북한의 핵능력이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양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 하지 못했다.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상황이다. 따라서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적 압박과 대화, 특히 실무자급 대화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이란 핵협상 모델의 북한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바이든은 오바마 시기처럼 북한문제 해결에 중국의 적극적 동참을 요구할 것이다. 미중 양국이 북핵불용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북한위협론'을 대중국전략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중국도 협력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자·촉진자 역할은 인정하면서도 중국의 개입을 꺼리는 북미 양자 톱다운 방식을 선호했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프로세스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국을 포함한 다자협상과 단계적 접근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2000년 10월에 합의한 북미공동코뮤니케에서 "쌍방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1953년의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보장체계로 바꾸어 한국전쟁을 공식 종식시키는 데서 4자회담 등 여러 가지 방도들이 있다는 데 대하여 견해를 같이하였다"고 합의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종전선언, 평화협정 등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추진에 중국의 관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양자협상과 다자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당선인은 11월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linchpin·핵심축)"이라며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불렀고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동맹을 린치핀이라고 했다. 바이든 당선인 역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의 린치핀이라고 부른 것은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거듭 재확인하는 의미를 가진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 평화-비핵 교환협상이 재개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면서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와 압박기조를 유지하면서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려면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득하면서 양자 또는 다자협상을 시도할 것이다. 미국 정권교체기에 북한이 전략도발을 자제하면서 상황관리를 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인도 북한 핵능력 감축의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어 북미협상이 예상보다 빨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에 대해 '미친개'라고 비난한 바 있고,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과정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thug)'라고 불렀다. 북한은 트럼프와의 신뢰관계를 이식하여 바이든을 비난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를 폄하하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지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인으로 공식 선언될 때까지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지난해 말 북한은 북미대결을 제재 대 자력갱생의 대결로 압축하고 장기전에 들어갔다.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시간이 그들 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미국 새 행정부에 대해 제재를 유지하면서 핵능력 고도화를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협상할 것인지 양자택일을 요구할 것이다. 북한은 국가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터라 몸값을 높이기 위한 전략무기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실험을 추진할 가능성은 높지 않고, 진전된 핵능력을 내세워 비핵화보다는 핵군축협상을 제안할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10월 22일 “한반도 비핵지대화(nuclear free zone)를 이끌기 위해 핵 능력을 감축(drawing down)하는 데 동의한다는 조건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새 행정부가 공화당 정부가 선호했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또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 방식의 선비핵화론에서 벗어나 비핵화를 최종목표로 두고 ‘핵능력 감축’을 우선하는 단계별 동시행동 방식을 수용할 경우 평화-비핵 교환협상은 조기에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정부의 입장을 반영하여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하는 경향이 있다. 클린턴 행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구상’을 수용하여 1999년 9월 ‘페리 프로세스’를 구체화하고 2000년 10월 북미공동코뮈니케를 만들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명박 정부의 ‘기다리는 정책’에 전략적 인내로 화답하여 북한 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한반도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가 주도적으로 정세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창의적인 안을 내면 동맹을 중시하는 미국 민주당 행정부도 우리입장에 동조할 가능성이 높다.

#### 4.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 노력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이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정체 국면에 빠진 것은 북미 사이에 신뢰조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프로세스가 진전을 보지 못한 것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과 미국의 ‘밝은 미래 보장’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상호불신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을 수 없다며 완전한 비핵화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북미 사이의 신뢰부족으로 선 행동 선순환에서 단계별 동시행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다.

북한은 2019년 연말에 개최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편하게 살도록 놓아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고 결

의했다. 이 전원회의에서 북한은 북미대결을 '제재와 자력갱생의 대결'로 압축했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 북미 평화-비핵 교환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준수하면서 남북관계 속도조절을 해왔다. 하지만 북미 협상이 지체되면서 남북관계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 아마도 북한의 의도는 무시하고, 미국의 선의를 너무 믿은 결과인지도 모른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이 미국의 새로운 계산법을 요구하면서 선미후남(先美後南) 자세를 보일 때는 우리 정부의 역할 공간이 상당히 축소됐다. 그러나 북미대결이 장기화하고 미국이 정권교체기에 접어든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정부가 북미협상을 전인하는 촉진자 역할과 남북관계를 복원하는 적극적인 당사자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비핵 교환프로세스가 가동을 멈춘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밝힌 조건부 비핵화론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내건 것은 군사적 위협해소와 체제안전보장이다. 북한은 한국전쟁으로 형성된 북미 적대관계에서 핵개발의 동기를 찾아왔다. 북한은 미국이 전쟁을 끝내고 군사적 위협을 가하지 않으면서 체제안전을 보장하면 핵을 버리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FFVD)를 실현하면 밝은 미래를 보장하겠다는 사실상 선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제재를 풀어주지 않았다.

교착국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종전선언 재추진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전쟁 발발 70년을 맞아 "이제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 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여건조성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한국전쟁이 정전협정 아래 70여년 간 정전질서로 굳어지고, 분단체제로 고착화되어 단기간 내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 의지를 담은 '종전선언'을 먼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을 맺을 때 전쟁을 종결하는 선언을 평화협정의 내용 안에서 포함시킨다. 한국전쟁의 경우 장기간 정전체제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전쟁을 끝내는 정치적·상징적 조치로 먼저 종전선언을 추진하여 전쟁 당사국 사이의 적대관계 해소와 비핵화를 촉진하고, 점진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수순을 밟아야 할 것이다.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이 70여년 동안 지속하면서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만들었다. 단순화해서 말하면 북한 핵문제는 끝내지 못한 한국전쟁의 산물이다. 한국전쟁이 재발한다면 공멸의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다. 전쟁을 종결하지 못하고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오랜 비정상이 분단체제로 구조화되면서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도 우리 사회 일각

에서는 종전선언을 둘러싸고 남남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국전쟁을 끝내지 않고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현상을 유지하자는 세력과 종전선언을 통해서 비핵화를 촉진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세력사이에 갈등을 지속하고 있다.

바깥으로 눈을 돌려보면 한국전쟁에서 대결했던 미국과 중국이 세계패권을 둘러싸고 전략경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한국전쟁을 끝내기도 전에 한반도가 미중의 패권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 한국은 두 강대국들로부터 자기편에 설 것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은 1992년 한중수교를 통해서 한국전쟁 시기에 형성됐던 한중 적대관계를 해소하고 중국이 한국의 제일 교역국이 됐다. 미국과는 한미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이란 말이 나오고 있지만 한국이 어느 한 편에 설 수는 없다. 그래서 한국정부는 미중 어느 한 편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자론(노무현 정부), 균형적 실용외교(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익외교에 따른 이익균형(문재인 정부)을 추구하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이 글의 일부 내용은 필자의 기고문 등을 수정·보완한 것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1부 토론>

### 기조발제 “COVID-19 이후 분단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대한 토론문

도지인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HK교수)

고유한 통일연구원 원장님의 기조발제 “COVID-19 이후 분단극복과 남북관계 개선 방향”은 하노이 노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및 COVID-19와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한 조건과 대안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기조발제는 기존의 미중대결 구도가 COVID-19와 무역갈등, 군사안보적 패권경쟁, 그리고 인권문제 등으로 더욱 격화될 것이 예고되는 가운데 현재 한국정부의 대안으로 생명공동체회복을 위한 남북협력과 종전선언 및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노력을 차기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와 의 긴밀한 조율 속에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관계복원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조하고, 우리의 대북정책이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유의하여 우리가 “창의적인 안”을 내서 민주당 행정부의 동조를 이끌어 낼 것을 촉구하였다. 이는 현재의 중첩적인 교착상태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인 해법을 촉구하는 것으로, 한국은 단순히 “중재자”가 아니라 가장 중심적인 “당사자”로 행동할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조발제에서 지적한대로 한국은 그동안 어느 정부이든지 미중 한편에 일방적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유지하면서 북한문제와 한반도문제를 관리해왔다. 그러나 기조발제에서 강조한 “기존의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관계복원 방안,” 미국에 대한 “창의적인 안”에 대한 구상이 착안되고, 지속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균형자” “중재자”로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주인”으로써, 또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써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공감을 자아낼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북한에 대해서도 공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한다. 여기에 바로 우리 정부의 근본적인 어려움과 딜레마가 있다.

한반도 문제의 관리에 있어서 한국은 이념적으로, 또 사회문화적으로 70년 동안 갈등반목을 거듭해온 북한과 대치하면서 협상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선언적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추진해야한다. 북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상대와 협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협상을 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대외적으로는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불신을 갖고 있는 우리의 전통적 동맹 미국과 물샐틈 없이 공조하면서 경제대국이자 북한의 동맹으로서 북한의 “합리적 안보 관심사(reasonable security concerns, 적대정책 포기, 관계 정상화,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거)”에 관심을 촉구하고 있는 중국과도 조율을 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국내여론까지 대북, 대미, 대중 정책 추진에 고려할 수밖에 없다. 이에 비하면 북한, 중국, 미국 다른 어느 관련국가도 이렇게 복잡한 입장에 처해있지 않다.

그렇다면 한국은 과연 어떠한 비전과 구상을 제시하여야만 국내적으로도 남남갈등을 최소화하고 관련국들과 공조 및 조율의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국제적으로도 공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한국정부가 앞으로 제시할 “타성과 관성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관계복원 방안”의 방향이 되어야 할

한다. 그렇다면 국내적으로도 잘 팔리면서 북한도 다른 관련국가도, 그리고 세계도 설득할 수 있는 한반도 문제 관리 정책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이 한반도의 주인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서 수호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한국이 주인의식을 갖고 문제해결의 교착상태의 돌파구를 제시한다는 것은, 북한, 미국, 중국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적 노력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비전과 방법을 제시한다는 데 있다.

이러한 과제와 관련해 우선 생각할 것은, 어떤 정책이 협상당사자를 상대하는데 있어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단 국내적으로 잘 팔려야 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현 정부의 인식이 아무리 바람직하더라도 현재 한국내에서도, 국제적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특히 북한의 핵무기개발 수준이 이미 보유국으로 되어서 비핵화협상을 전혀 새로운 차원으로 만든 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사이의 정상합의에도 불구하고 대남도발이 더욱 극적으로 심화된 것(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북한체제가 UN제재에도 불구하고(또는 제재때문에 더욱 더) 우리식 사회주의, 우리식 경제관리와 같은 기조를 강력히 추진하는 점 (시장 규제와 국산화정책)은 과거시대의 남북, 또는 북미, 다자 양자 협상 어떤 선례도(햇볕정책, 북미정상회담, 6자회담, 이란핵문제 다자협상, 전략적 인내 등) 그대로 적용될 수 없는 2020년대의 북한의 현실이다. 분명히 현재 세계가 목도하는 북한의 현실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을 막 벗어나던 2000년대 초중반과는 북한의 내부정치, 대중관계, 그리고 대미인식이 달라졌다.

그렇다면 어떤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외적 공감대를 극대화할 것인가? 당연히 평화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오직 평화만이 가장 넓은 공감대를 가장 많은 사람들 속에서 형성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 우리국민들 사이에서 평화가 왜 중요한지, 우리가 평화를 함께 만들려는 북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북한체제는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용적이면서 현실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서 “방역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연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 협력,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 철도연결 등 협력 사업들을 추진하고 남북 합의사항을 실천하여 ‘평화와 공동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문제는 이런 사업들을 함께 하겠다는 대상자인 북한사람과 북한체제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대를 막론하고 아주 막연한 정보와 고정관념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남남갈등이 심해지는 것이다. 남남갈등이 너무 심하여 우리정부의 입지가 축소되기 때문에 결국 미국의 정책에 기대를 걸어보거나 중국의 역할에 대북관리를 아웃소싱하려고 하는 소극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평화가 왜 필요한지, 평화의 상대는 누구인지, 그리고 서로의 차이와 공통성을 인정하는 바탕에서 남북이 새로운 현실을 바탕으로 합의해 나가야 할 “통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대국민 교육과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굳건한 국내적 지지를 받는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가서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우리의 이익을 최대 확보할 수 있다. 새로 취임하는 바이든 정부와의 조화로운 공조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고 추진되는 원칙과 가치에 입각한 대북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외투만 벗으면 봄이 오는 것처럼 행동한다는 인상을 주는 정책을 가지고는 대내적으로도, 대외적으로도 설득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 북한이 비핵화의 구체적인 행동을 하고 북미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을 다 떼어놓고 종전선언부터 하자는 입장이 어떻게 국내외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가?

통일연구원이 우리가 평화를 함께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결과  
나의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연구들을 이끌어가는데 누구보다도 큰  
혜안을 갖고 계실 원장님의 리더십을 기대한다.

## <1부 토론>

# 휴전에서 평화로, 군사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 코로나 19 이후의 세계와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이태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상임집행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1.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들 한다. 과거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일상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전세계가 깨닫고 있다. 코로나 19를 계기로 사람과 자연의 관계, 경제와 산업을 비롯한 사회적 시스템과 문화에 대한 생각이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동안 생각해 왔던 우선순위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면에서도 코로나 19는 여러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과 북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 구성원이나 행위자들의 우선순위의 변화로 인한 영향, '안전보장'에 대한 인식 자체의 변화로 인한 영향, 국제관계에 대한 생각변화로 인한 영향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문제는 주로 안보 이슈, 특히 군사안보와 관련된 이슈로 다루어져 왔다. 그런데 군사적 위협 이상으로 감염병의 위협, 일상적인 경제적 삶의 위기가 더욱 심각하게 느껴지는 현실 속에서 군사적인 위협에 관한 문제가 주변화되고 군사적 수단에 의존해 왔던 기존 방식에 대한 회의도 깊어지고 있다. 이런 회의는 국제관계나 남북관계에 대한 기존의 관념에도 다양한 도전을 가져다 주고 있다. 군사동맹 위주의 냉전식 국제관계에 대한 관념을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국제적 협력과제의 우선순위가 생명과 안전, 인도적 협력에 관한 것이 되고 있다. '코로나 휴전' 이 유엔 등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더욱이 코로나 19 대응에서 미국, 중국 등 기존 강대국들의 리더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가변이 볼 수 없다. 토론자가 지난 3년간 진행하고 있는 평화통일 비전 사회적 대화<sup>1)</sup>에서는 시민들이 최근 1-2년간 '자주적 외교역량', '균형외교' 문제를 관심의제로 선택하는 빈도가 급격히 높아졌다.

이 점에서 한반도 문제를 인간안보 문제로 다루고, 생명과 안전을 위한 협력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도 이런 방향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 정부 스스로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는 것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 와서도 여전히 군사동맹, 군사력 강화, 그리고 핵역지력에 의존하는 '전통적'

1) 보수·중도·진보 시민사회단체와 7대 종단으로 구성된 한국종교인평화회의가 공동으로 구성한 '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전국시민회의'가 2018년부터 통일부, 서울시, 인천시 등과 진행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한 속의 프로그램이다. 보수측에서는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 진보측에서는 역시 전국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중도단체로는 흥사단, YMCA등이 참여하고 있다.

군사전략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지 않고 심지어 더욱 커지고 있다. 이는 핵-미사일 억지력에 의존하려는 북한과의 협상을 교착시키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노딜 이후 ‘상응조치’에 대한 불신과 논란을 부르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2.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 두 정상은 손을 잡고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고 연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국 회담을 추진하기로 합의 했지만 현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사실상 멈춰 섰다. 협상은 교착되는 반면, 북한에 대한 미국 주도의 국제 제재는 더 촘촘해졌고, 남북 간의 최소한의 교류 협력조치 번번이 가로막히는 일이 잦아지자 남북 관계에도 점점 불협화음이 심해졌다. 급기야 지난 6월에는 일부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계기로 남과 북의 군사적 긴장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아 남과 북이 맺은 군사분야 합의서의 효력마저도 위태로운 위기 상황이 초래되었고 북한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렸다. 이 일은 당국간 관계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마음도 얼어붙게 했다.

한반도의 핵 갈등의 근본원인을 다시 성찰하지 않으면 돌파구가 없다. 한반도 핵갈등은 지난 70년간 지속되어온 불안정한 정전체제의 산물이다. 한반도 핵 위기는 어느 일방이 아니라 남한, 미국, 주변국과 북한 사이의 누적된 불신에 의해 악화되어 왔다. 남한은 지난 10년간 북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를 상회하는 군사비를 지출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주한미군의 군사비는 제외한 수치다. 2018년 북한의 명목 GDP는 35조 6,710억 원이었고, 남한의 국방비는 약 43조 2천억 원이었다. 북한은 재래식 군비 경쟁에서의 열세 속에서 핵·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전력을 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는 한반도의 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북미 외교 관계 수립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북미 정상 역시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 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할 수 있다(mutual confidence building can promote th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고 확인했다. 서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줄이고 신뢰를 구축하며, 무엇보다 한국전쟁을 끝내는 것이 한반도의 핵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 될 수 있다.

같은 이유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은 북한만이 아니라 다른 주변국들의 군사전략이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전략으로 바뀌어야 실현될 수 있다. 북한의 핵무기 폐기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의존하고 있는 미국의 핵우산 역시 폐기되어야 한다.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핵 없는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라도, 온전한 의미의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압도하려 함으로써 상대방의 군사주의를 부추기는 실패한 군사전략, 상대방의 핵무기 포기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은 핵무기의 보호를 받거나 핵무기를 가진 나라의 도움을 받겠다는 군사전략을 바꾸려면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 코로나-19가 야기하는 우선순위의 변화에 착목한다면 더욱 그렇다.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여 전세계의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전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보여주고 설득하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한반도로부터, 우선 남한으로부터 군사안보에서 인간안보로의 전환, 국가안보에서 시민안전으로의 전환, 군사동맹에서 생명평화협력으로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3.

지난 7월 27일, 한국전쟁 휴전기념일을 계기로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주요 종단이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이라는 이름으로 한반도의 휴전상태를 평화체제로 바꾸기 위한 국제캠페인을 시작했다.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한국전쟁 70주년인 6월 25일 각계인사와 단체들에 의해 제안되었고,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 2023년 7월 27일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원하는 시민의 힘으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 난관에 부딪힌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휴전에서 평화로 나아가자!’는 목소리를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모아가는 시민 평화 행동이다. 한국전쟁 발발 70년인 2020년부터 정전협정 체결 70년이 되는 2023년까지 종전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선언(Korea Peace Appeal)에 대한 전 세계 시민들의 서명과 세계 여러 나라의 시민사회, 종교계, 정부와 의회의 지지 선언을 모아내는 것이 이 캠페인의 주된 행동계획이다. 이 서명과 선언을 남, 북, 미, 중을 포함한 한국전쟁 관련국 정부와 유엔(UN)에 전달하고 압박하여 정전 70주년이 되는 2023년까지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다. 그러자면 가급적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에서 1억명의 서명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반도 평화 선언은 한국전쟁을 끝내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전세계에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4가지 시민의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까지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러시아어, 아랍어로 번역되었고 다른 언어로도 번역될 예정이다. 전세계 시민들이 읽고 서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한국전쟁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체결합시다
- 핵무기도 핵위협도 없는 한반도와 세계를 만들시다
- 제재와 압박이 아닌 대화와 협력으로 갈등을 해결합시다
- 군비 경쟁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시민 안전과 환경을 위해 투자합시다

이 선언의 초안은 이 캠페인이 최초로 논의되기 시작한 2019년 12월부터 공식제안된 2020년 6월 24일까지 이 캠페인의 제안서에 서명한 180여개 단체와 각계인사 470여명의 의견을 모아 작성되었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에는 2020년 10월 현재, 7대 종단을 비롯하여 국내 360여 개 종교·시민사회 단체와 50여 개 국제 파트너 단체가 함께하고 있다. 참여단체들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캠페인 사이트( <https://endthekoreanwar.net>)를 통해 연중 온라인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이 사이트를 통해 자국의 언어로 서명할 수 있다.

1억명 서명이 쉽지 않은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불가능한 목표는 아니다. 예를 들어, 히로시마 원자폭탄 사용 직후인 1949년, 핵무기 사용 반대하는 국제서명운동(스톡홀름 어필)이 시작되었는데 2년여만에 전세계에서 3억명 이상이 참여했었다. 한반도 종전평화를 위한 국제서명운동(코리아 피스

어필)에 1억명의 서명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이 서명운동 과정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 종교인들(예를 들어 프란치스코 교황), 영향력 있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정치인들, 노동조합들, 그리고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동참이 이어진다면 1억명의 동참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1억명 서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이 연결망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서 1억명의 숫자 못지 않은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다.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의 중심수단은 서명운동이지만, 그것만 하려는 것은 아니다. 한국 지자체와 의회의 참여 조직, 세계 각국 정부와 의회의 참여 조직, 미국 대선과 유엔 총회 등 계기별로 우리의 요구를 알리고 국제협력 활동을 진행하는 ‘시민평화로비’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미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선자에게 한반도평화선언을 소개하고 북미관계개선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는 활동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 밖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 토론회, 시민대화, 한국전쟁 희생자와 피해자의 실태를 알리는 ‘시민평화대화’,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의 종전 평화 의지를 집회, 시위, 기타 상징행동으로 표현하는 ‘시민평화행동’, 그리고 종전평화 메시지를 담은 문화컨텐츠를 개발/전파하고 시민들간의 온-오프라인 문화교류를 기획하는 ‘시민평화문화교류’를 꾸준히 진행할 예정이다.

전쟁을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다. 우리가 전쟁을 끝내는 사람, 평화를 만드는 사람(Korea Peace Maker)이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 70년이면 충분하다, 휴전에서 평화로. 우리가 이 전쟁을 끝내자

## COVID19 이후 한반도 여성평화운동의 전략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

### 1. 코로나 시대, 뉴노멀의 도전

오늘 WPS(여성·평화·안보) 전문가 포럼에서 “COVID19 이후 한반도 여성평화운동의 전략”이란 주제로 발제를 하게 되어 무거운 마음입니다. 11개월 전 1월 말에 저희 단체가 2020년 총회를 개최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오랫동안 마스크를 쓰고 비대면으로 소통하는 것이 일반화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겪는 이 변화의 의미를 세계의 석학들이 규명해 주고는 있지만, 이를 내 삶에서 어떻게 수용할지 아직도 헤메고 있는 상황에서 “COVID 19 이후의 한반도 여성평화운동의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능력 밖의 일입니다. 다만, 이렇게 변화된 상황을 함께 고민하면서 두려운 우리의 현실을 직면하고 함께 닦쳐온 도전을 헤쳐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담당한 자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저는 오늘 코로나19 이후 한반도 평화운동의 전략 수립을 위해 올 한해 우리가 올해 빈번하게 접한 단어-개념들을 통해 향후 여성평화운동이 나아갈 길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올해 사람들은 ‘언택트’(비대면), ‘뉴노멀(new normal)’과 같이 새롭게 의미를 찾은 언어 환경에 적응하며 살고 있습니다. 온라인 줌(zoom) 회의가 일반화되면서 사람들의 소통을 중계하는 기술이 매우 중요해졌는데, 이런 기술의 보유자나 기술 행위자는 주로 남성들이고 대부분의 여성들은 기술에 의존하여 소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성들이 뉴노멀 환경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기술적 차원에서 자율성을 획득하고 변화된 환경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것인가,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의제를 만들고 제안하고 이끌어갈 것인가, 이것이 여성들 앞에 놓인 당면 과제인 셈입니다.

언택트는 우리를 새로운 적응으로 이끌고 불편하고 답답하게 하지만, 한편 새로운 컨택트와 연결의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대륙과 지역별로 시간대가 다르긴 하지만 사람들이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사이버 공간에 모여 각자의 의견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뉴욕이나 파리, 스톡홀름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노트북이나 핸드폰을 통해 바라보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효율성 혹은 경제적 측면이 있다는 점도, 어쩌면 새로운 환경이 가져다준 장점 혹은 부수효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12월 2~3일 진행되는 한겨레 아시아 미래포럼의 주제는 “팬데믹 이후의 세계: ‘연결’에서 ‘연대’로”(Solidarity via Connectivity - 연결을 통한 연대)입니다. 이제 기술적 연결, 접속, 대

면을 통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윤리적 연대로 나아가야 할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는 인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컨택트, 연결이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라면 이를 통한 연대와 공존의 길 모색은 우리의 선택인 동시에 책임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스크를 쓴 채 살아가는 이 시대, “얼굴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임마누엘 레비나스가 말한바, “고통받는 사람들의 얼굴에 대한 책임”이라는 명제랄까, 그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섬세하게 마스크 이면의 사람들의 얼굴을 살펴야 하는, 그 얼굴에 보이는 고통에 책임을 지는 타자윤리를 함께 지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 2. 코로나 19 시대, 대통령의 연설에 등장한 “인간안보”

뉴노멀은 기존의 안보개념에 대한 보충과 보완을 요구하여 인간안보<sup>2)</sup>/여성안보 개념과 담론, 실천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동안 평화운동에서 주장해 온 “인간안보” 개념이 코로나19 시대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올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코로나19와 보건의로 강화, 재난/질병/환경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인간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 ▣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기념 대국민연설 중(2020.5.20.)

성공적 방역에 기초하여,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중심에 놓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협력을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의 안보는 전통적인 군사안보에서 재난, 질병, 환경문제 등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요인에 대처하는 ‘인간안보’로 확장되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연대와 협력으로 힘을 모아야 대처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와 아세안, 전세계가 연대와 협력으로 인간안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주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

\*\*\*\*\*

2) 김정수, 조영주, 『여성, 평화, 안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매뉴얼 개발』, 여성가족부, 2018, p. 17 참조. 인간안보(Human Security) VS.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 인간안보 개념은 전통적 안보 이해에 대한 도전으로 생겨났다.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접근은 국민국가의 권리(nation-state rights)를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는다. 인간안보는 사람 중심적 접근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에 초점을 둔다. 인간안보는 경제, 식량, 건강, 환경 차원의 불안정을 다룸으로써 안보 위협의 범주를 확장한다.

○ 전통적 안보는 국가안보 중심의 이해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물리적 정치적 통합성을 방어함으로써 세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접근법인데 반해, 인간안보는 개인의 안보(안전)를 국가적, 지역적, 지구적 안정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인간안보 개념은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안들을 뒷받침한다. 1325 결의안은 특별히 인간안보 개념 안에서 여성과 젠더 이슈를 포함하기 위하여 ‘사람’(people)이란 용어를 재정의한다.

여성과 젠더 이슈를 포함함으로써 1325 결의안은 다음은 확인한다.

- 여성은 평화와 안보 유지와 진전에서 동등한 참여와 개입에 대한 근본적 권리를 지닌다.

- 젠더는 분쟁과 평화건설 이니셔티브의 성공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 문재인 대통령 제75주년 광복절 경축사(2020.8.15.)

진정한 광복은 평화롭고 안전한 통일 한반도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삶이 보장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고 남과 북의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남과 북의 국민이 안전하게 함께 잘살기 위해서입니다.

(중략)

**한반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안보이자 평화입니다.** 방역 협력과 공유하천의 공동관리로 남북의 국민들이 평화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되길 바랍니다. 보건의료와 산림협력, 농업기술과 품종개발에 대한 공동 연구로 코로나 시대 새로운 안보 상황에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와 함께 생명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길 바랍니다.

(중략)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인도주의적 협력과 함께, 죽기 전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가보고 싶은 곳을 가볼 수 있게 협력하는 것이 실질적인 남북 협력입니다. **남북 협력이야말로 남-북 모두에게 있어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입니다.** 남북 간의 협력이 공고해질수록 남과 북 각각의 안보가 그만큼 공고해지고, 그것은 곧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서 번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보 개념의 확장을 요구하는 측은 여성운동/평화운동/시민운동이었습니다. 기존의 안보 개념을 고수하는 쪽은 현실주의 정치 권력이나 군사안보 진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시대 언택트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언택트가 함의하고 요구하는 다양한 삶의 조건의 변화로 인한 안보 개념의 변화, 그 대안으로 제안되는 인간 안보 확대에 대해서는 그 개념을 명확하게 사용하거나 수용하기를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여 인간안보 개념보다는 '신안보'라는 개념으로 혹은 '포괄적 안보'라는 차원에서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반도가 아직도 전쟁 중이고(휴전상태), 북한의 핵으로 인한 비대칭적 안보 조건, 한국군 전시작전권이 아직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있다는 현실, 그리고 심화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 국가적 생존과 발전전략 등을 고려한 차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통일연구원에서 개최한 '한반도형 협력안보와 평화프로세스 학술회의'에서 "'선비핵화'를 탈피, '협력안보'로 평화전략 세우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sup>3)</sup> 남-북-미 관계에서 키친 게임이 아니라 상호안전보장 차원에서 이뤄지는 '공동안보'와 '협력안보' 제안이 매우 반갑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 시대 뉴노멀의 환경에서 안보환경 역시 변하지 않는 것과 변하는 것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잡으면서 사람들의 안녕과 안전을 보장할 안보와 평화의 조건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하고 이를 평화운동 차원에서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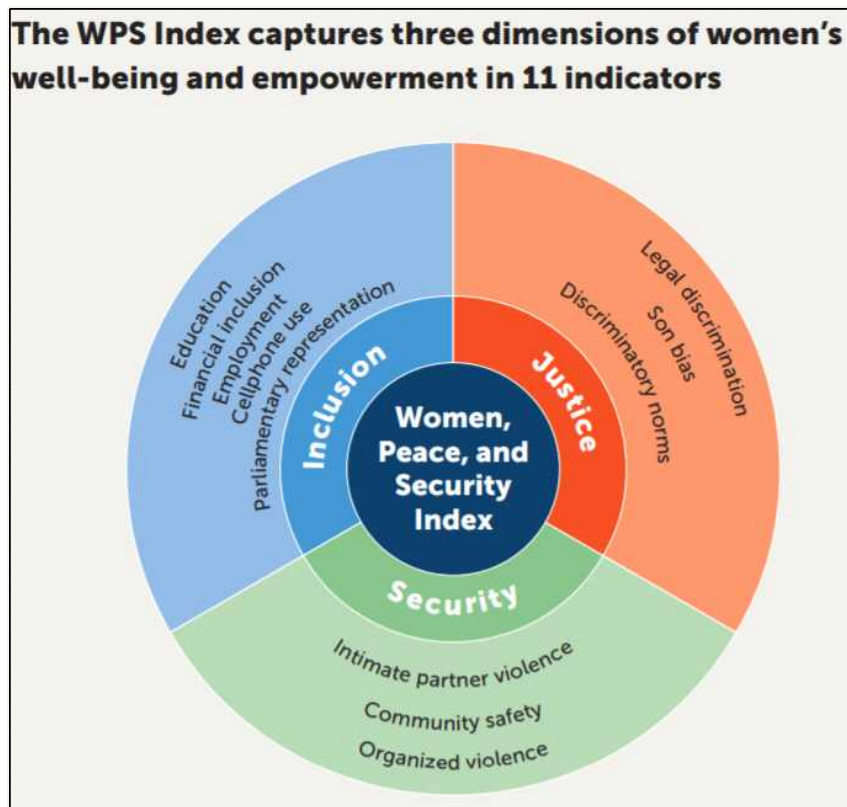
3) 고유환 통일연구원 원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상호안전보장과 협력적 상호위협감소, 평화의 제도를 중심으로 놓는 한반도형 협력안보를 제안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중심개념인 '협력안보'에 대해 "적대하는 상대와 실천가능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고 상호위협을 감소시킴으로서 안보를 증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http://www.tongi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3230>

9월 초 온라인 중계로 진행된 여성가족부의 ‘2020 글로벌 성평등포럼’에서 유종일 KDI 원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펜데믹 보다 더 위험한 것이 경제(위기)다. 그런데 경제보다 더 위험한 것이 기후 위기다”... 2020년 현재 우리는 펜데믹-경제-기후 위기의 세 가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성들은 이 세 개의 위기에서 가장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환경/현실 속에서 한반도 여성평화운동의 전략은 어떻게 수립될 수 있을까, 여성들은 어떻게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하여 평화의 길을 열어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제기됩니다.

## 2. 코로나19 시대, 여성의 안전(Safety/Security)과 안녕(Well-being)이 더욱 취약해짐

워싱턴의 조지타운대 여성·평화·안보연구소(Georgetown Institute for Women, Peace, Security)는 매년 전 세계 국가의 ‘여성·평화·안보지표’(WPS Index)를 발표합니다. 이번에 코로나19와 여성의 안전/안녕의 상관성을 연구한 결과, 여성에 대한 포용성, 정의, 안전(안보) 지표가 낮은 나라가 코로나 위기에 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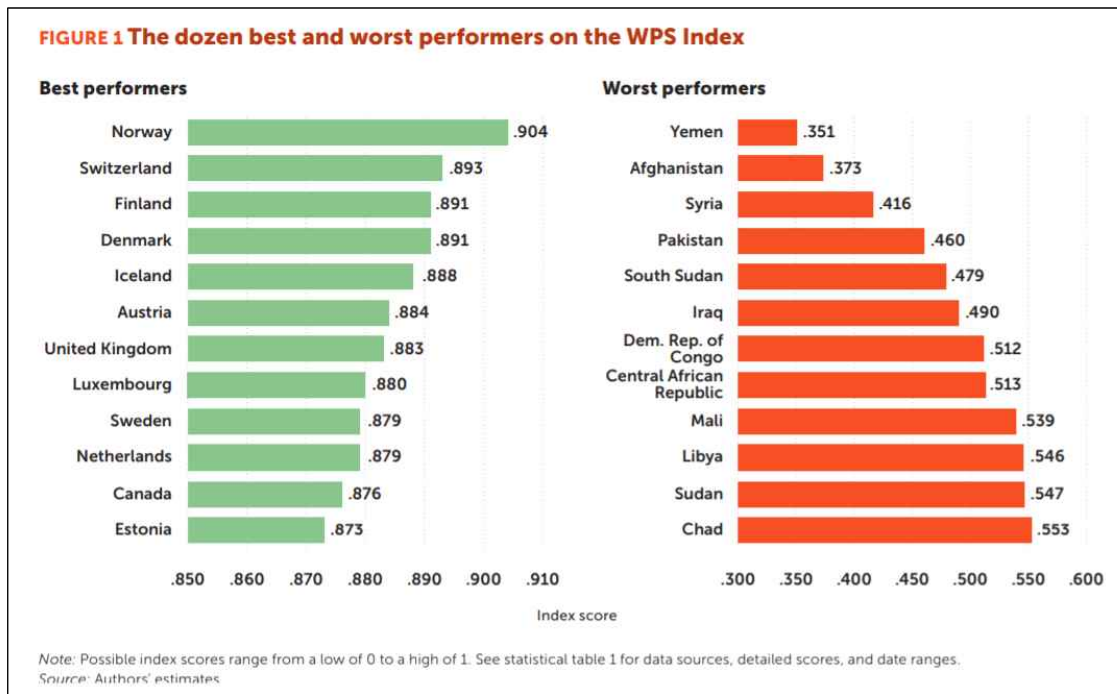


WPS 지표는 포용, 정의, 안전(안보)은 포용, 정의, 안보(안전)이라는 세 국면의 11개 지표를 통해 여성의 삶의 안녕과 역량을 강화시키고자 구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

과 같습니다.

<b>포용성</b>	교육, 재정/경제, 고용, 핸드폰 사용, 의회(국회/지자체) 대표성
<b>정의</b>	법적 차별, 남아 선호, 차별적 규범들
<b>안전/안보</b>	친밀한 파트너 폭력(가정폭력 포함), 공동체 안전, 제도(구조적) 폭력

2019/2020년 WPS 지표가 높은 나라는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노르웨이, 스위스, 핀란드, 덴마크 등 북유럽이나 서유럽 국가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WPS 지표가 낮은 나라는 예멘,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등의 국가들인데, 이들 국가들이 바로 현재도 무력분쟁이 진행되는 나라들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816 33위이고, 미국은 .851 19위, 중국은 .725 76위, 일본은 .823 29위, 러시아는 .770 51위입니다. 북한은 충분한 데이터가 없는 관계로 WPS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PRIO Center On Gender, Peace and Security & Georgetown Institute for Women, Peace, and Security, *Women, Peace and Security Index 2019/2020*, (2020), p. 20.

코로나는 기존의 위기를 더 심화시킨다. 이것을 WPS 지표의 주요 축인 포용, 정의, 안전 영역에서 어떻게 더 악화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로힝야 난민여성들의 현실입니다.

미얀마 정부 '난민 불인정' 기조 고수  
 코로나 이후 밀입국·범죄 급증세  
 검사 부족해 감염 확산세 최악 우려

세계 최대 규모 난민, 가장 박해 받는 소수민족. 2017년 8월25일 이후 미얀마 군부의 유혈탄압을 피해 방글라데시로 도망친 로힝야족을 설명하는 가슴 아픈 수식어다. 3년이 지난 현재, 안타깝게도 로힝야족 앞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코로나19)에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는 타이틀이 또 하나 붙었다. 가뜰이나 열악했던 삶의 환경이 감염병 창궐에 안성맞춤 조건이 되면서 어렵게 이어온 생존의 끈마저 송두리째 끊길 위기에 놓였다. (한국일보 2020.8.25.) <https://news.zum.com/articles/62330998>

방글라데시 콕스바자르라는 곳에 미얀마에서 피난 온 약 100만 명 규모의 로힝야 난민촌이 있습니다. 이곳이 코로나19로 lockdown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유엔여성에 의하면 코로나19 이후 가정폭력이 전 세계적으로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힝야 난민촌 같은 곳은 약 70% 이상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의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로힝야 난민여성들을 지원하는 ‘아디’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에서 지난 5월에 “코로나19 위기 속 로힝야 난민여성들의 월경위기”에 직면하여 이들 여성들을 지원하는 캠페인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코로나19로 lockdown(출입금지)되어 물 길러 가는 것도 제한되었습니다. 먹는 물, 목욕할 물 뿐 아니라, 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면 생리대를 세탁할 물도 부족해졌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하루 평균 286리터의 물을 소비하는 데 비해 로힝야 난민촌 여성들은 11리터 밖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시장이 문을 닫고 일자리도 부족해 생리대 구입이 어려워졌는데 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일상의 고통입니다. 생리대를 세탁하지 못해 오는 어려움, 이것은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하는 삶의 구석구석까지 코로나19가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여성에 대한 폭력, 젠더 폭력이 심화된 것은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의전화연합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가정폭력이 더 심해졌는데, 문제는 1366 같은 여성폭력 긴급전화 상담은 가능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 입소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 불가능해진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위험에 더 노출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아울러 성폭력과 젠더 폭력, 그리고 비정규직 여성노동, 여성의 돌봄 노동 증가, 디지털 격차 강화, 의료접근성 약화 등등 그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 **3. 여성의 일상의 삶의 경험을 반영한 안보개념의 재구성, 인간안보를 한반도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WPS(여성.평화.안보) 지표는 우리가 hard security라 부르는 전통적 군사안보와 매우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 안보의 내용이 바로 여성을 비롯한 시민들의 삶의 안전과 안녕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한 것이라면, WPS 인덱스는 인간안보/여성안보의 실질적 내용을 보여줍니다.

저는 코로나19 시대의 여성평화운동 앞에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혹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위험, 위기, 재난을 포함한 포용적 관점의 안전/안보 개념을 구축한 바탕에서 우리 삶의 안전을 통합적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는 과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께서도 이미 광복75주년 경축사에서 “핵이나 군사력의 의존에서 벗어나 살 수 있는 최고의 안보정책”으로 남북협력을 제안했고, 보건의료, 산림협력, 농업협력, 경제협력 등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남북이 합의한 협력 사업을 통해 남북 공동안보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위기 앞에서 남북의 협력은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하고, 전세계적으로나 한국 상황에서 취약계층인 여성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을 볼 때 북한에서도 전체적으로 여성들의 어려움이 더 가중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이런 걱정을 뒷받침합니다.

**< 북한 영유아·임산부 등 인도적 실태 >**

- ✓ '19년 △북한 식량 부족 인구 1,220만 명(전체 인구의 47.8%) △5세 미만 아동의 20% 만성 영양실조, 27.9% 발육부진, 10% 저체중(북한 중앙통계청 통계 등)
- ✓ 5세 미만 아동의 3%(140,000명)가 만성 영양 장애, 그 중 30,000명 사망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평가(UN OCHA 「2020 필요와 우선순위」 '20.4.)
- ✓ 임산부·수유부의 만성영양결핍과 산후출혈·감염·패혈증·임신기간 합병증에 의해 산모사망률이 높은 상황(1,000명당 82명으로 남한(11명)의 8배)
- ✓ 북한 내부 보건의료서비스 접근의 어려움으로, 설사·폐렴에 의한 사망률이 높고, 도·농 및 계층간 격차 심화로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 증대
  - 1,000명 당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15명(남한 比 5배) △영아 사망률 12명(4배) △산생아 사망률 9명(6배)
- ✓ 코로나19로 △국제기구 인력 입북 불가 △백신 등 주요 의약품 북한 내 고갈 우려 등 인도적 위기 가중(2020.3.25, 'UN Global Humanitarian Response plan COVID-19' 보고서)

따라서, 남북의 보건의료협력, 북한의 영유아와 모성보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로 그 중요성과 시급성이 더 커졌습니다. 다만, 현재와 같이 남북관계가 전면적으로 단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할지, 그것은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 차원을 넘어 통일·외교·안보 관련 부처가 국내적·국제적 차원(특히 바이든 정부 북미관계 개선)에서 접근되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고, 여성들이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서 지금까지 남성고위급 정치인/전문가가 독점적으로 수행되어 온 영역에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의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4.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와 1325 국가행동계획**  
**→ 한반도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를 어떻게 실질적으로 촉진시킬 것인가?**

WPS(여성·평화·안보) 지표는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와 후속결의안의 구체적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조지타운대 여성·평화·안보연구소는

미국을 비롯한 유엔과 국제사회의 WPS 의제 확산과 촉진을 위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연구’ 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유엔안보리결의 1325호가 채택된 지 20년이 됩니다. 한국에서 2014년 5월 국가행동계획이 채택된 후 2020년 현재 2기 국가행동계획에서는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경찰청, KOICA가 참여하여 5개 분야(예방/참여/보호/구호와 회복/이행 점검) 12개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예방	1. 분쟁예방, 평화활동 관련 종사자 여성, 평화, 안보 인식 및 역량 제고 2. 국방, 안보, 평화, 통일, 재난 위기 정책에서의 성인지 접근 확대 3. 국제협력을 통한 여성, 평화, 안보 활동 강화 4. 여성, 평화, 안보에 관한 대 국민 인식 제고
참여	5. 국방, 안보, 평화, 통일 분야에 여성 참여 확대 6. 국방, 안보, 평화, 통일 분야 민간 거버넌스 활성화
보호	7. 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 지원 8. 군 성폭력 피해 지원 9. 탈북 여성 및 난민 지원
이행 점검	12. 이행 기반 내실화

2018~2020년 2기 국가행동계획 기간 동안 한국의 여성단체들은 WPS 아젠다의 동북아 지역화 (Regional)-국내화(National)-지방화(Local) 통합적 접근을 추진하고, WPS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담론발굴과 글로컬(GLOCAL) 여성평화 실천과 연대에 참여해 왔습니다.

- ‘1325 경기행동강령 채택’ (2020년 경기여성단체연합)
- NAP 5개 기동 콘텐츠 발굴/발전방향 제안/대중화 및 DPRK 1325 NAP 수립 제안 및 2019년 8월 GPPA NEA모임에서 북측인사에게 제안 (평화를만드는여성회)
- WPS 동북아 네트워크 구축(유엔여성, UNDPPA, GPPAC NEA+여성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여성단체의 실천과 연대는 3기 국가행동계획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평화운동의 실천의 성과가 1325 국가행동계획의 콘텐츠 발굴로 이어지고 이런 것들이 모일 때 국가행동계획의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이 지난 3년의 경험입니다.

이제 3기 국가행동계획에 ‘한반도 평화구축 과정에 여성참여’의 실질적 방법과 내용을 발굴해야 할 다음이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여성가족부 내 ‘1325 조정관 배치’를 통해 WPS 의제를 참여 부처 내 주요 과제로 통합 - 특별히 한반도 평화과정에 여성참여 방안 법.제도화
- 2) 여성단체와의 거버넌스를 통해 1325 국가행동계획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구축과 ME Report 제출

3) 민관 WPS 역량강화를 위한 트레이닝 프로그램 개발과 공동참여

## 5. 코로나 19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군사주의화,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1325 국가행동계획에 통일부나 국방부가 아직 제대로 채택하지 못한 과제가 바로 증대되는 군사주의에 대한 대안적 접근을 통한 실질적 인간안보의 확보라는 과제입니다. 올해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의 자료에 의하면 2010~2019년 한국의 국방비 증가는 중국의 85%에 이어 36%로 세계 2위입니다. 아마도 이런 증가라면 아마도 3~4년 후에는 한국보다 GDP 3배 정도 되는 일본보다 높은 국방비 지출이 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Table 2. The 10 countries with the highest military expenditure in 2019**

Rank	Country	Military expenditure, 2019 (US\$ b.)	Change in military expenditure (%)		Military expenditure as a share of GDP (%)		Share of world total, 2019 (%)	
			2018-19	2010-19	2019	2010		
2019	2018							
1	1	United States	732	5.3	-15	3.4	4.9	38
2	2	China	(261)	5.1	85	(1.9)	(1.9)	(14)
3	4	India	71.1	6.8	37	2.4	2.7	3.4
4	5	Russia	65.1	4.5	30	3.9	3.6	3.4
5	3	Saudi Arabia	(61.9)	-16	14	(8.0)	8.6	(3.2)
6	6	France	50.1	1.6	3.5	1.9	2.0	2.6
7	9	Germany	49.3	10	15	1.3	1.3	2.6
8	7	United Kingdom	48.7	0.0	-15	1.7	2.4	2.5
9	8	Japan	47.6	-0.1	2.0	0.9	1.0	2.5
10	10	South Korea	43.9	7.5	36	2.7	2.5	2.3

( ) = estimated figure; GDP = gross domestic product.

Note: Figures and percentage shares may not add up to stated totals or subtotals due to the conventions of rounding.

그런데, 코로나19 시대, 대통령께서 인간안보를 강조하는 데 따라 보건의료, 사회복지, 경제회복 등에 국가의 재정을 투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방예산은 계속해서 증가될 전망입니다. 2020년 처음으로 국방비는 50.2조가 되었고, 2021년에는 52조 9천억의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인간안보는 강조하지만, 군사안보와 별개로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별개로 진행되는 안보 담론의 실질적 통합, 이를 통해 평화지향적 방위예산을 확보할 것인가가 ‘여성, 평화, 안보’ 담론 구축과 전략 모색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하여, 저는 여성평화운동이 동아시아 여성들의 반군사주의 연대를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주의를 비판하는 운동의 전개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018년 이후 진행된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라운드 테이블’을 플랫폼으로 하여 확대되는 미-중경쟁, 일본의 군사주의, 북한의 핵개발 등에 대응하여 증대되는 한국의 군비확장에 대한 여성들의 비판적 평화연대를 구축하는 여성평화주의 어드보커시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 6. 중단된 남북여성교류 재개를 위한 준비는?

아래 자료는 필자가 지난 11월 16일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한 것이다. 현재 중단된 남북여성교류를 재개하기 위한 준비작업 차원의 제안으로 남북여성 신뢰구축, 법.제도적 개선, 역량강화, 남북여성교류 의제발굴, 동아시아 여성연대 등의 과제를 함께 논의하면서 진행하기 바란다.

<b>1</b>	<b>성인지적 남북여성교류 의제 설정과 액션 플랜 만들기</b> - 여성,평화,안보 (WPS) 아젠다 기반 의제 설정 및 실천과제 도출 - SDGs 기반 성평등, 여성건강권, 아동발달권 관련 협력사업 - 남북여성의 실질적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성평등한 한반도 구축 여성 경제인 교류확대, 개발협력 /경협추진 시 여성 참여 /지원 체계 마련, 공동학술행사 북한여성 건강 /교육 관련 협력사업
<b>2</b>	<b>한반도 종전과 평화,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 연대 활동</b> - 남북여성 종전 평화캠페인, 동북아 평화체제, 평화군축, 한반도 /동북아 비핵화
<b>3</b>	<b>역량강화</b> - 남북여성교류 주체 역량 형성과 참여자 확대 - 북한사회와 북한여성 이해하기
<b>4</b>	<b>지속가능한 남북여성 교류기반 마련하기</b> - 남북교류협력 관련 법률 및 제도 정비 - 여성교류협력 추진 지원을 위한 인력 배치 및 기구 마련 (가칭) 남북여성교류협력위원회 설치 - 여성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b>5</b>	<b>동북아 WPS 네트워크 구축 및 다자적 접근을 통한 남북여성 교류와 협력의 장 마련</b> - UNDP/PPA : 동북아 여성평화안보 라운드 테이블 (2018) - DPRK 1325 NAP 수립 관련 협력 - GPPAC 동북아위원회 - 여성,평화,안보 포럼 개최 추진 등

※ 참고, 김정수, “남북여성교류 30년 성과와 과제” 2020.11.16.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주최 학술회의 [여성, 한반도 평화를 말한다 -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여성주의적 성찰] 발표 자료 중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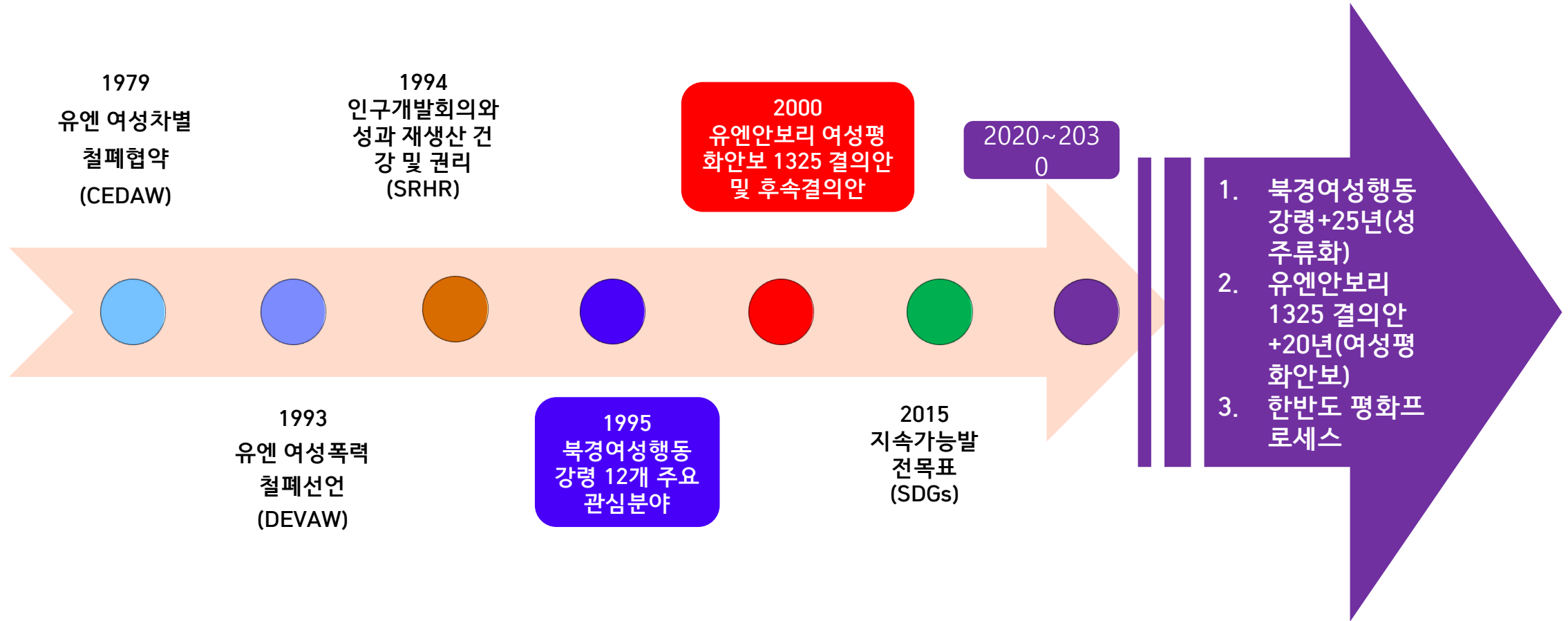


+  
•  
○

# 유엔안보리 여성평화안보 1325 결의안 20주년의 과제

조영숙 양성평등대사/한국여성단체연합 국제연대센터 소장

# 북경여성행동강령 25주년과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20주년



# 북경여성행동강령에서 제기된 분쟁관련 성폭력 문제 해결과 평화건설과정의 여성참여에 관한 국가정책화 요구

• Women and Poverty (빈곤)	• Women and Power & Decision making (권력과 의사결정)
• Women and Education & Training (교육과 훈련)	• Women and Institutional mechanisms (제도적 장치)
• Women and Health (건강)	• Women and Human rights (인권)
• Women and Violence Against Women (여성에 대한 폭력)	• Women and Media (미디어)
• Women and Armed conflict (무력분쟁)	• Women and Environment (환경)
• Women and Economy (경제)	• Girl child (여아)

E. 여성과 무력 분쟁 : 무력 갈등에서 국제 인도법의 규범을 완전히 존중하고 특히 강간, 강제 성매매 및 기타 형태의 부적절한 폭력행위에 대해 여성과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전략적 목표 E.3).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대한 여성평화운동단체의 비판

**WHERE ARE WE NOW?**  
BUSINESS AS USUAL MEANS A MANDATE THAT CONTAMINATES PEACE BY INFUSING PATRIARCHY

**A FEMINIST SECURITY COUNCIL AGENDA**  
REQUIRES A SHIFT TOWARD FEMINIST PEACE TO CULTIVATE PEACE BY INFUSING GENDER JUSTICE

**Business as Usual:** EXCLUSIVE AND GENDER BLIND ANALYSIS, USE OF VETO, ARMS PROLIFERATION, TOP-DOWN APPROACH, EXCLUDED CIVIL SOCIETY VOICES.

**Feminist Security Council Agenda:** DEMOCRATIC REFORM, BOTTOM-UP APPROACH, DISARMAMENT, INCLUSIVE GENDER POWER ANALYSIS, MEANINGFUL CIVIL SOCIETY PARTICIPATION.

HOW COULD THE UN SECURITY COUNCIL MANDATE WORK FOR WOMEN?

**WHERE ARE WE NOW?**  
BUSINESS AS USUAL MEANS A MANDATE THAT CONTAMINATES PEACE BY INFUSING PATRIARCHY

**A FEMINIST SECURITY COUNCIL AGENDA**  
REQUIRES A SHIFT TOWARD FEMINIST PEACE TO CULTIVATE PEACE BY INFUSING GENDER JUSTICE

**How the UN Security Council Mandate could work for women:** PARTNERSHIPS, FUNCTIONS AND POWERS, TRANSPARENT AND INCLUSIVE PROCESSES, PEACEFUL DISPUTE SETTLEMENT, COMPOSITION.

# 유엔안보리 1325 결의안 채택 요구

- 1995년 유엔 제4차 여성회의에서 채택된 북경여성선언 및 여성행동강령은 모든 유엔회원국에게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strategy)으로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행(implementation) 요구.
- 안보리는 전쟁의 본질이 점차 민간인(전쟁의 수단으로 성폭력 자행)을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이 계속 평화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00년 10월 31일 유엔안보리에서 여성, 평화 및 안보에 관한 오픈 세션을 진행하여 만장일치로 채택.
- 1325 결의안은 폭력적 갈등과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전쟁의 과도한 영향뿐만 아니라 분쟁 예방, 분쟁 해결, 평화 유지 및 평화 구축과정에서 여성이 해야 할 혹은 이미 수행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강조. 특히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포함은 지역 사회 내의 평화와 안정을 성취하고 유지하는 모든 면에서 중요한 것으로 간주.
- 1325결의안은 모든 행위자들에게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모든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추가할 것을 촉구함. 또한 분쟁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여성과 소녀들을 모든 유형의 성에 기반한 폭력, 특히 강간 및 폭력적인 총돌 시 특히 널리 퍼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
- 1325 결의안은 참여(participation) • 보호(protection) • 예방(prevention) 및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의 4 pillars 포함.

# UNSCR1325 결의안에 포함된 여성평화안보의 4대 기둥

1. **참여(participation)**: 국가, 지역 및 국제기구를 포함하여 모든 의사 결정 수준에서 여성의 참여를 증가시킬 것을 촉구. 갈등의 예방, 관리 및 해결을 위한 메커니즘, 평화 협상, 평화유지활동에 여성의 참여가 중요하게 제기.
2. **보호(protection)**: 난민 캠프와 같이 긴급 상황과 인도주의적 상황을 포함하여 성과 젠더에 기반한 폭력(sexual and gender based violence, SGBV) 으로부터 여성과 소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히 조치가 요구.
3. **예방(prevention)**: 국제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기소하는 것을 포함하여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을 위한 개입 전략을 개선 할 것을 촉구. 국내법에 따라 여성의 권리를 강화하고, 지역 여성 평화 운동 및 분쟁 해결 프로세스를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취약성을 줄이기 위해 젠더를 고려한 접근(gendered approaches to reducing fragility)” 을 채택할 것을 요구.
4. **구호 및 복구(relief and recovery)**: 난민 캠프의 민간인 및 인도주의 지원의 본질을 존중하고 난민 캠프 및 정착촌 설계에 여성과 소녀들의 필요를 고려하는 등 젠더 렌즈(gender lens)를 통해 국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구호 및 복구 조치의 발전을 촉구.

※ 1325 국가행동계획(NAP) + CEDAW 일반권고 30호(2013) = 국제규범의 국내 이행 가속화(Accelerating action on WPS) 를 위한 국가책임 강화: 평화협상과정, 인도주의 지원활동, 평화유지활동, 분쟁 후 평화 구축 및 통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젠더 전문가의 참여와 젠더 관점 통합을 지속적으로 요구

# 유엔안보리1325와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일반권고)

일반권고	CEDAW General Recommendation(GR) 주요내용
<p>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일반권고 제30호(201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쟁/갈등해결 시 결과적 평등(substantive equality) 원칙</li> <li>• 분쟁의 모든 과정(분쟁예방, 분쟁과정, 분쟁 이후 등)과 영역(참여, 예방, 보호, 구호/복구)에 여성 참여와 성평등 관점 반영 촉구</li> <li>• NAP 이행 예산배정, 여성단체와의 협력 등 강조</li> </ul>
<p>유엔여성차별철폐 협약일반권고 제35호(201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젠더기반폭력(Gender Based Violence, GBV) 금지를 국제법 관행으로 인정</li> <li>• 성과 재생산건강 및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의 침해를 젠더기반폭력으로 규정</li> <li>• 폭력을 낳는 사회규범과 스테레오타입의 변화를 저해하는 문화/전통/종교의 변화 촉구</li> <li>• 자국의 관할권 밖에서 행해지는 자국민 또는 자국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촉구</li> <li>• 젠더기반폭력을 방조하는 법과 정책의 폐지 및 개정 촉구</li> <li>• 모든 분야에서의 여성의 자율성과 의사결정권의 강화 촉구</li> </ul>

#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일반권고 30호

Women in conflict prevention, conflict and post-conflict situations (2013)



#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채택된 여성평화안보관련 결의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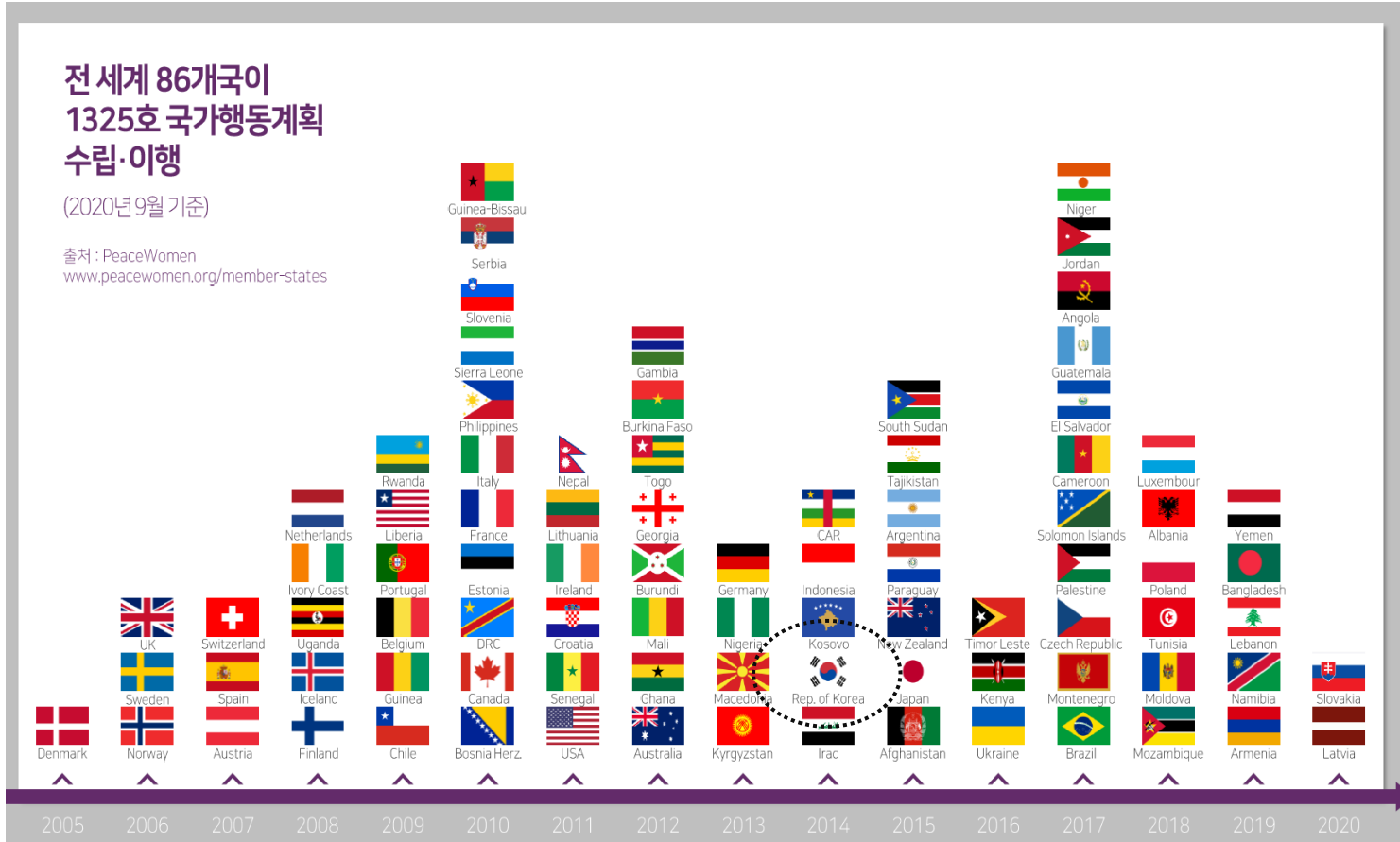
결의안 번호	채택 연도	주요 내용
1325호	2000년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최초의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결의
1820호	2008년	- 성폭력 문제 및 평화협정에 여성의 참여 보장 강조 - 유엔평화유지군의 임무 및 성폭력에 대한 처벌 강화
1888호	2009년	- 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임명 및 전문가 팀 현장 파견 - 성폭력에 대한 무관용
1889호	2009년	- 국제적 이행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 개발 - 1325호 이행을 위한 국내적 조치 촉구
1960호	2010년	- 무력분쟁에서의 성폭력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 강조 -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근절을 위한 해결 방안 도출을 분쟁당사자들에게 촉구
2106호	2013년	- 각국의 자발적 이행 노력 및 체계적, 구체적, 적극적 조치 강조
2122호	2013년	- 군·경찰인력의 여성 비중 확대, 갈등조정 및 평화정착 과정의 여성 참여와 여성 리더십 강화
2242호	2015년	- 여성평화안보(WPS) 요소를 유엔 및 안보리 의제 전반에 걸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 - 여성·평화·안보 의제 전문가 집단 구성 및 실행 기구 구성
2467호	2019년	- 가해자에 대한 안보리 제재 강화 - 피해자 중심의 접근과 피해자에 대한 배상 및 생계지원 강화, 여성의 역량 강화
2493호	2019년	- 여성·평화·안보 관련 그간의 안보리 결의안 이행 촉구 - 평화·안보 의제의 여성의 참여 확대 및 여성의 모든 사회·경제적 권리 향상

# 유엔안보리1325결의에 따른 국가행동계획(NAP) 수립

## 전 세계 86개국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이행

(2020년 9월 기준)

출처 : PeaceWomen  
www.peacewomen.org/member-states



- 2005년 이후 각국은 1325결의안 이행 위해 국가행동계획(UNSCR 1325 National Action Plans, NAPs) 수립하기 시작.
- 2018년 12월 현재, 유엔회원국의 40%에 달하는 79개국이 국가행동계획채택.
  - 34개국(43%)만이 NAP 이행 예산 배정.
  - 57개국(72%)이 NAP 이행 모니터링과 평가 시행하고 있으며, 분쟁 하 성폭력과 젠더의 연계성에 대한 분석이 불충분.

# 여성평화안보의 새로운 흐름: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Feminist Foreign Policy



# 스웨덴: 페미니스트 외교정책

Feminist Foreign Policy (2014~)

1. 목표 1 :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을 완전히 향유하도록
2. 목표 2 :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도록
3. 목표 3 : 분쟁예방, 분쟁해결, 분쟁 후 평화 건설과정에 여성과 소녀들이 참여하도록
4. 목표 4 : 여성과 소녀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 참여와 영향력 발휘하도록
5. 목표 5 : 모든 여성과 소녀들이 경제적 권리와 역량강화를 완전히 향유하도록
6. 목표 6 : 여성 및 소녀들의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
7. 목표 7 : 스웨덴 외교부는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활동

# 캐나다: 페미니스트 국제지원정책

## Feminist International Assistance Poli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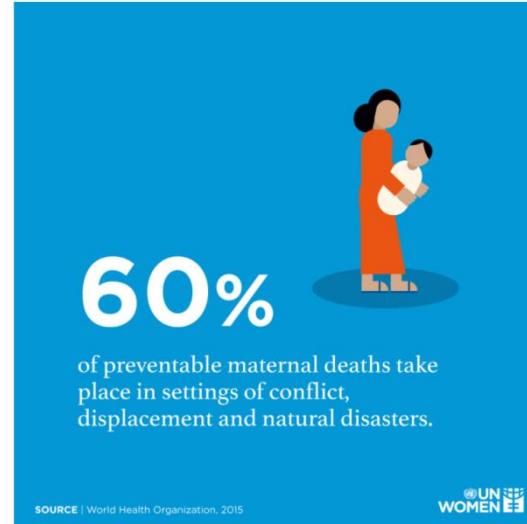
1. 캐나다 양자원조의 총액 중 15%를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목표의 독자사업예산으로 배정
2. 여성권리, 여성리더십, 성평등 활동 전개하는 NGOs에게 향후 5년간 1억5천만 캐나다달러 (약 1,362억) 배정
3. 모든 원조사업에 반드시 성평등과 여성세력화 과제 포함 의무화. 만일 성평등 과제 포함시키지 못한 이유가 분명히 제시되지 않을 시 사업추진 불가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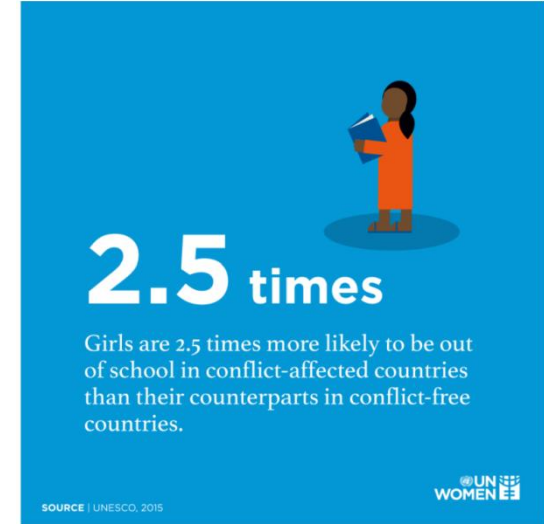
# 인도적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과 남성의 차이에 대한 이해



- 성폭력/가정폭력/성착취 증가
- 사회적격리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제한



- 모성보호 부재
- 몸에 대한 결정권 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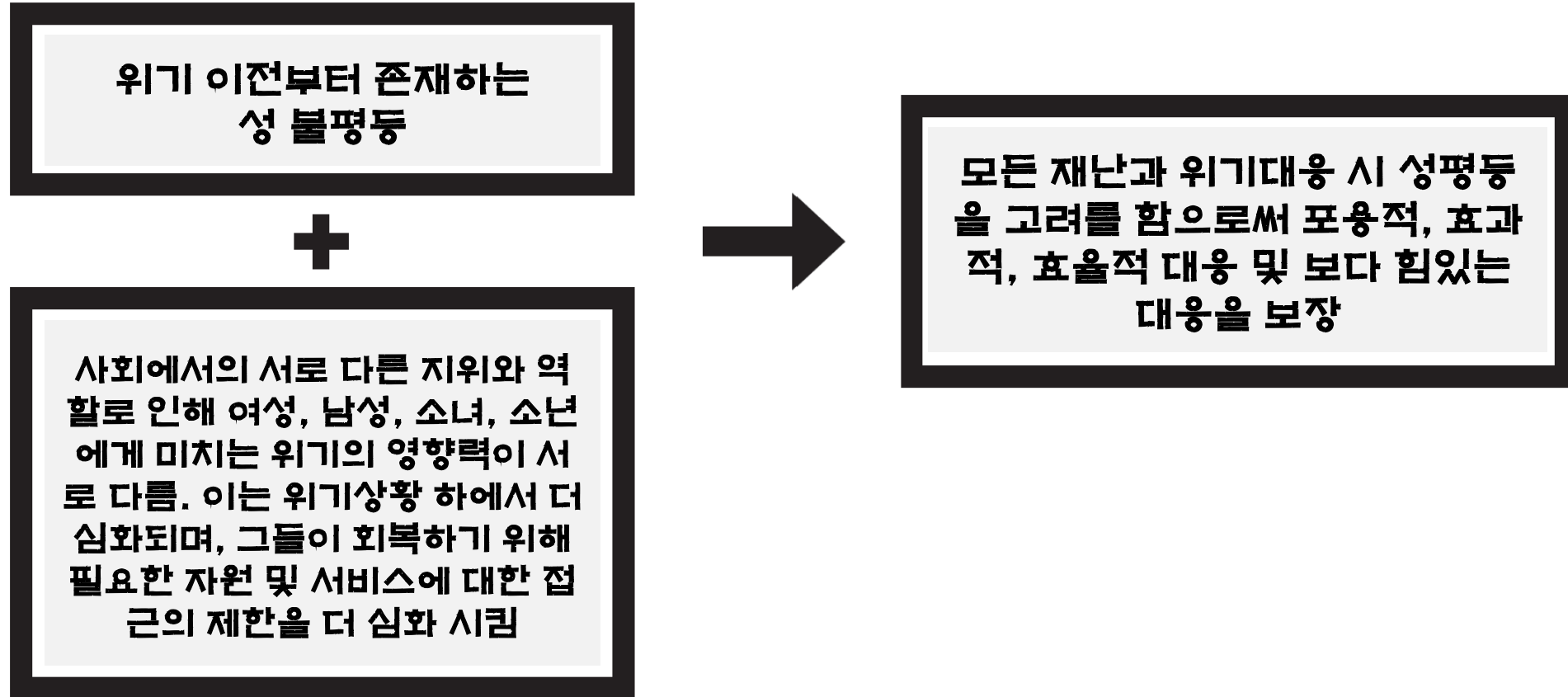


- 교육기회 박탈
- 변화의 주체가 될 기회 박탈

1. 여성의 필요와 관심의 차이에 대한 이해의 부재
2. 여성이 수행하는 역할 및 기여에 대한 인정의 부재
3. 여성에게 필요한 의사결정권한 부여 노력의 부재

기존 불평등의 새로운 심화

# 분쟁, 재난, 인도적 위기와 성평등



# 재난과 위기상황에서 고려되어야 할 성평등 원칙

- 성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권리, 삶의 전망과 기회를 가질 때, 그리고 자신의 삶을 형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이루어진다.
- 인도주의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성 평등 관점;
  - 위기는 여성, 소녀, 소년 및 남성에게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
  - 여성과 남성 사이의 기존 권력 불평등은 위기 동안 더욱 악화된다
  - 여성, 소녀, 남성 및 소년은 서로 다른 욕구와 대처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 여성, 소녀, 남성 및 소년은 지원 혜택을 받을 기회가 서로 다를 수 있다
  - 여성과 소녀들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설계하고 전달하는 데 중요한 자원이다
- 성 평등 관점을 갖춤으로써 무력 충돌을 유발하거나 인구 집단 간의 긴장을 악화 시키거나 사람들을 폭력 및 GBV와 같은 기타 형태의 학대에 노출시키지 않는 방식, 즉 “해를 끼치지 않는”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지원을 설계하고 제공하도록 해야.

❖ 젠더 관점이 없는 프로그램은 목표를 벗어나고, 가장 배제된 사람에 대한 접근성이 결여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원을 제공하거나, 부주의하게 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

# 인도적 지원 + 발전 + 평화의 통합

## Humanitarian Action + Development + Peace NEX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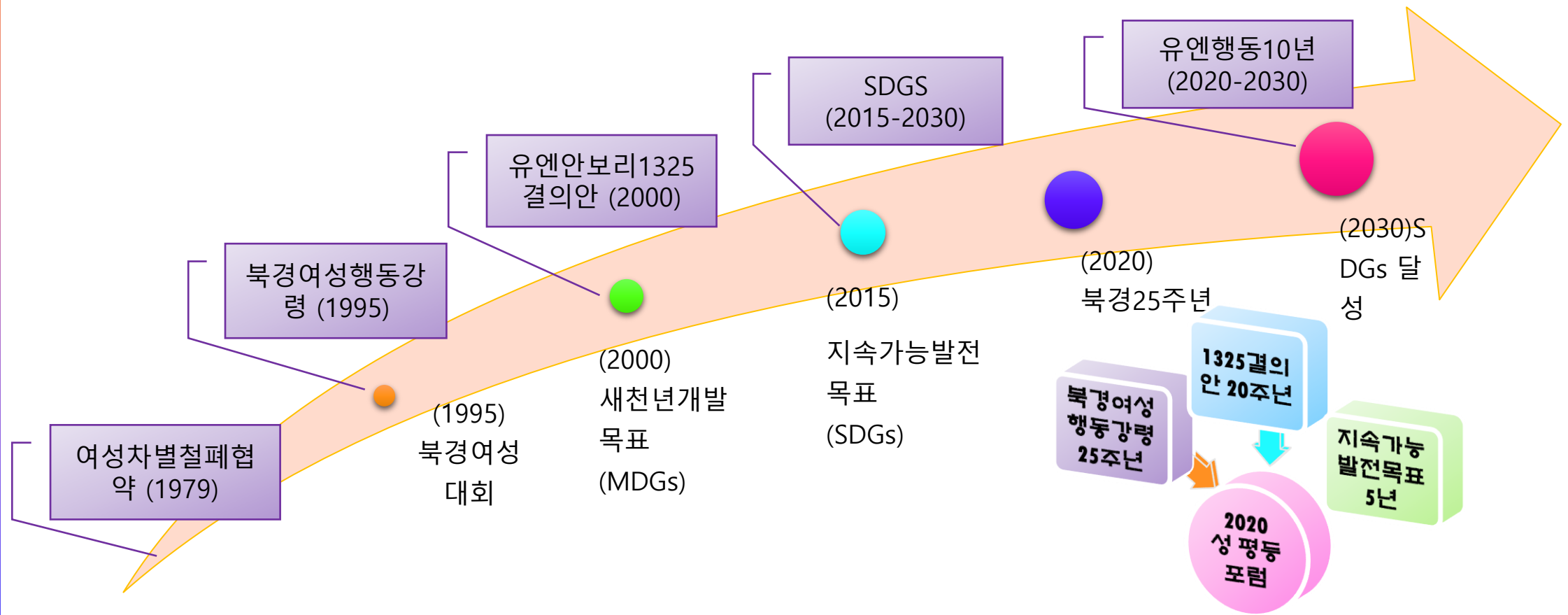
- 장기화된 위기는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복잡하고 중복되는 결과를 안겨주고 있으며, 인도주의-발전-평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을 수반함
- 상호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 기관과 사회에서 탄력성을 구축하고 여성과 소녀를 이해 관계자와 변화의 주체로 권한을 부여해야 함.
  -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험을 줄이고 복원력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
  - 인도주의-발전-평화 활동 사이의 경계를 허물고, 현지의 주인의식을 보장하고, 민간 부문을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집단적 성과를 달성해야 함.
  -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일하는 활동가들은 위기 상황에서 집단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 평등과 GBV 프로그램 및 옹호 전략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해 협력해야 함.
- 인도주의 프로그램은
  - 젠더 변환적인(gender transformative) 방식으로 설계되고 전달되어야 하며
  - 여성의 평화 협상, 안보 부문 개혁 및 분쟁 후 재건에 대한 완전한 참여를 촉진해야 함.
  -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자금조달 메커니즘과 프로세스를 옹호하면서 언제나 인도주의 원칙이 항상 유지되도록 보장해야 함.

# 인도적 지원 + 지속가능발전 + 평화가 통합된 포괄적 여성평화안보

BPfA 12개 관심분야	UNSCR 1325	SDGs 5번 목표	SDGs 16번 목표
A. 여성과 빈곤	분쟁 하 성폭력 방지 및 여성참여 (중재자, 협상대표) ▶ 참여 ▶ 보호 ▶ 예방 ▶ 구호 및 복구	5.1 모든 곳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없앤다. 5.2 인신매매와 성 착취 및 기타 유형의 착취를 포함하여, 공적 및 사적인 영역에서 여성 및 여아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없앤다. 5.3 조혼, 강제 결혼, 여성할례 등 모든 유해한 관행을 없앤다. 5.4 국가별 상황에 맞춰 공공서비스, 사회기반시설, 사회보호정책, 가정 내 책임 공유 촉진을 통하여 무급 돌봄 노동 및 가사노동에 가치를 부여하고 중요성을 인식한다. 5.5 정치, 경제, 공공부문 등 모든 차원의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참여와 리더십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한다. 5.6 세계인구개발회의 행동계획과 베이징 행동강령 및 검토회의의 결과문서에 따라 합의된 대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재생산 권리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보장한다. 5.a 여성에게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와 더불어 토지 및 기타 유형의 자산·금융서비스·유산·천연자원에 대한 주인의식과 통제권 접근에 대한 평등한 권리가 부여될 수 있도록 국내법에 따라 개혁을 시행한다. 5.b 여성의 자력화를 증진시키는 구현 기술, 특히 정보통신기술(ICT)의 활용을 확대한다. 5.c 모든 수준에서 성 평등과 여성 및 여아의 자력화가 이루어지도록 견고한 정책과 시행 가능한 법안을 채택하고 강화한다.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과 그로 인한 사망률을 대폭 감소  16.2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착취, 인신매매와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고문의 종식  16.7 모든 수준에서의 의사결정이 응답적, 포용적, 참여적, 대의적이 되도록
B. 여성과 교육훈련			
C. 여성과 건강			
D. 여성에 대한 폭력			
E. 여성과 무력분쟁			
F. 여성과 경제			
G. 여성과 권력 및 의사결정			
H. 여성지위향상 위한 제도적 장치			
I. 여성인권			
J. 여성과 미디어			
K. 여성과 환경			
L. 여아			

# 유엔 행동 10년과 성 평등의 가속화

Decade of Action (2020~2030): Global Action - Local Action - People Action



# 세대평등 행동연합과 여성평화안보 및 인도주의 행동 세대평등 협약

## Action Coalitions for Generation Equality

Action Coalitions are global, innovative, multi-stakeholder partnerships that will mobilize governments, civil societ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the private sector to: **catalyze** collective action; **spark** global and local conversations among generations; **drive** increased public & private investment; **deliver** concrete, game-changing results across generations for girls and women.

The selected Action Coalition themes are:

1. **Gender-Based Violence**
2. **Economic justice and rights**
3. **Bodily autonomy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SRHR)**
4. **Feminist action for climate justice**
5. **Technology and innovation for Gender Equality**
6. **Feminist movements and leadership**

1. 젠더기반폭력	3. 몸의 자율성과 성과 재생 산건강 및 권리
2. 경제정의와 권리	5. 성 평등을 위한 기술과 혁신
4. 기후정의를 위한 페미니스트행동	6. 페미니스트 운동과 리더십



GENERATION EQUALITY COMPACT ON WOMEN,  
PEACE AND SECURITY AND HUMANITARIAN ACTION

CONCEPT NOTE

19 JUNE 2020

### 2021 Paris Forum to 2025:

- Annual high-level meeting of Compact Members on the margins of the General Assembly high-level debate.
- Annual reporting on the margins of the WPS Open Debate in October (and/or at the Commission on the Status of Women).
- 2023 Financing Forum to track financing commitments, as part of the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process.
- 2025 Global Commitments Forum to present progress on commitments, as part of the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process.

2021-2015

- 유엔총회 고위급 회의참여
- WPS 공개토론에 보고서 제출
- WPS 관련 예산배분 평가포럼개최 (2023)
- 책임이행관련 글로벌 포럼 (2025)

## <2부 토론>

### 평화과정에서의 여성참여확대 & 평화역량 강화

- ‘보편’을 뒤집기, 경기도를 중심으로.

경기여성단체연합 이 정 아

‘숙련’.. 사전적 의미는 오랜 연습, 훈련을 통해 능숙해짐을 의미한다.

그 반대 의미로 ‘비숙련’은 발전, 역량을 강화 시켜야 할 대상으로, 주로 ‘여성’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한때 여성을 범주화하여 발전대상으로 여기기도 했으며 좀 더 역량을 쌓아야만 하는, ‘역량 강화’의 뜻은 여성에게 익숙한 단어다. 지금도 많은 지점에서 그러하다. 그래서 ‘숙련’은 젠더화 되어 있다. 성주류화는, 이 지점에서 발견되는 질문을 정의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즉, 여성이 사회 주류 영역에서의 의사 결정권을 획득하는 형태로 사회 체계를 바꿔내는 작업이 포함되는 개념...그러나 이조차 추상적인지라 성주류화’라 쓰고 ‘우리도 동등한 사회권을 주장하는 것’이라 설명하는 작업이 쉽지가 않아져 왔다. 특히 평화, 안보 의제에 있어서는 강력한 원팀(남성) 주류 분야로, ‘숙련’을 무기 삼아 적/아군의 이분법과 상호작용, 사회적 담론을 형성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 틈바구니에서 여성평화 이슈, 또는 여성평화 아젠다 형성은 여러 루트를 만들어가며 균열을 내기 위한 고군분투 그 자체였다. 여성 인권과 평화운동의 역사와 기반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을 촉발하여 오늘에 이르고, 기지촌 여성운동의 연결은 일정 부분 운동의 성과를 내며 지역 조례제정(경기도 기지촌여성지원을 위한 조례, 동일한 목적과 정의를 둔 파주시 조례)에 까지 이르고, 군가산점제 폐지 운동을 포함, 법제도개선을 위한 소파(SOFA)개정,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이르기까지, 지난 했던 역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여성이 평화를 이야기해야 하고 운동의 현장에서 이슈로서 지속 되어야 하는지 설명의 톨을 제공한다. 이 흐름에 여성의 강력한 연대조직, 네트워크의 힘이 작동했음은 분명하다.

1325국가행동계획 3기 이행이 가까운 시간 안에 진행될 것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적극적인 ‘지역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때 행위자 주제성으로서의 ‘여성’과 대중 형성의 행위자 ‘남성’과의 간극을 줄이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며 여성참여 확대는 중요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경기도 내 대규모 미군기지가 있었거나 현재 주둔중인, 그 주변(기지촌)의 삶의 역사는 낙인과 편견으로 가득차 일상의 삶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가해’와 ‘피해’ 외 설명되지 않고 있다. ‘안보관광’ ‘전단살포’ ‘철책선’으로 대별 되는 DMZ(민통선) 내 삶 역시 다른 언어로 설명되지 않은 채 많은 지점에서 비가시화되어 있다. 탈북민 중 여성들의 삭제된 삶의 복원은 또 어떠한가? 파주 내 미군기지였던 캠프 하우스에 조성된 ‘파주 엄마의 품 동산’은 전쟁과 여성의 관점 어느 지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을까? 이러한 역사적, 지역적 상황들이 ‘지역화’에 대한 질문에 포함되어 있다. ‘남성’은 질문하지 않는 부분이다.

경기도는 현재 약 216개 위원회 중 평화 이슈와 연관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성 35.3% /평화정책자문위원회 여성 22.2%/ 평화통일교육위원회 여성 20%...이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지역 내 평화운동 단체 대부분 남성 위주 구성원들이다. 경기도 평화협력 기반조성, 통일대비 남북교류, dmz 일원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 관광활성화 등의 사업비 예산이 한해 약 290억 3천만원이다. 이 안에 통일교육 아카데미 (위탁교육) 5천만원, 북한이탈주민 취업교육 2억원, dmz 생물권지역 주민교육 5천만원이다. 미루어 짐작하건대 이 수업의 수행자 대부분 여성일 것(소액의 예산으로 운영 가능하기 위해서는)이다. 여기 까지 와 있다.

그리하여,

경기도-동북아권 국제여성평화심포지엄 정례화,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실효적 조치 마련, 미군 위안부 문제 구체화하고 경기도지역 전수조사, 경기도 여성평화인권 박물관 건립,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기금에 여성 관련 사업비 할당을 위한 도 조례개정, 평화안보 사업의 주요 결정구조 내 여성 참여 확대 및 여성 전문가 발굴, 경기도/경기도 교육지원청/경기권 군부대 내 성폭력 예방 교육을 위한 협의체 구성, 외국인 성매매 피해 여성 지원기관 설립, 경기도 북한 이탈주민지원 사업 내 여성에 대한 지원사업 조사, 1325지역 행동계획 경기 여성으로부터! 등이 선언되고 의제화를 위한 경기행동강령(안)이 마련되어 다음 단계를 고민하고 있다.

이러한 동력은 여성 내부로 부터의 발현이다.

방식에서의 변화의 시급함도 인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전세대를 관통하며 디지털 라인으로 흡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라인에서의 운동 전략과 담론의 장으로서 어떻게 사람과 사람 간의 친밀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음이다. 장소와 장소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담론과 담론이 연결되는 상황에서 익명성과 속도전이 기존의 여성평화운동 방식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촘촘히 들여다봐야 한다.

‘여성의 역량강화’는 이 지점에서 ‘남성’을 기준으로 또는 특정 집단의 과 포집된 정보를 얻어 갖는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에서 스스로 생성된 질문들을 네트워킹하며 담론을 구성하고 이를 확산하며, 물결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 과제는 나 포함 우리 모두의 것이다. 그리하여 또 다른, 이제는 기술적인(디지털 방식) 종속의 형식까지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지 않기 위한, 동일한 의사결정권자로서 주체적 역할을 하는 것, 그 주체화 실현을 위한 의미로 ‘역량강화’이며 ‘성주류화’요 구이며 새로운 평화 담론의 장이어야 한다. 1325여성네트워크 재구축은 이런 의미에서 시대적 요구에 대한 하나의 출발선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에 얽어 ‘지역’을 중심으로 내용에 깊이를 입혀 나는 것이 주류운동 주변부 사람들의 목소리까지 담아내는 기회가 될 것이며 기존의 권력적 개념과 위치를 전복해 낼 수 있는 효과와 만날 것이다. 코로나19가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누가 됐건, 어느 집단이건, 그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지금, 상상가능한 가까운 미래의 시간성으로 나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을 알아가는 그 순간이 자원이 될 수 있고 힘이 될 수 있음을 여성평화운동의 과정에서 발견해야 하고 축적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남성1의 온존성(?)에 여성의 결핍(?)을 탈피하고자 동일한 조건을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여성주체성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획득해 나갈 것인가 질문하고 현시점에서 보편이라 여기는 것들에 판지 걸고 더욱 구체적인 질문 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변화의 단초 들을 길어 올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여성학자 정희진의 기획으로 출간된 베티 리어든의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는 전쟁에 페미니즘

의 관점을 개입시킨 도전적 저서라 소개되고 있다. 그 내용 일부를 그대로 적어보면..

<전쟁의 작동 원리 자체에 인간의 특성을 남성성과 여성성으로 나누고 위계화하는 성차별주의가 자리한다는 것, 그렇기에 성차별주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전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등의 가치는 국가안보에 종속되어 밀려났다, 전쟁이란 무력을 이용해 국가들이 벌이는 싸움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경쟁적인 사회질서로, 인간관계에서부터 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전쟁의 기저에는 폭력이 있다> 그래서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길이다.**”<sup>1)</sup>

여성에게 평화는, 안보는 무엇인가? 이 과정에 왜 여성은 가시화되지 않는가 질문을 이어가며....

---

1) ‘성차별주의는 전쟁을 불러온다’저자 베티리어든과 평화학자 정희진과의 한겨레 토요판 지면 인터뷰 (2020.07.12.) 내용 중 발췌



# 한반도 평화와 평화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에는 없는 것들

조정아(통일연구원)

# 1. 통일교육의 위계

## ▶ 통일교육지원법(1999년 제정):

통일교육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

## ▶ 국정과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94.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국민협약 추진: 소통·참여·교육 등 유기적 연계로 통일공감대 확산과 통일대비 역량

## ▶ 통일부, 『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2018)

통일교육 목표: 평화통일의 실현의지 함양,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 균형있는 북한관 확립, 평화의식 함양, 민주시민의식 고양

## ▶ 통일부, “통일교육 기본계획(2019~2021)”: 통일교육의 개념

-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데 필요한 긍정적 인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
-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을 대화와 타협·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평화역량을 키움으로써 평화감수성과 평화의 가치를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 강조

## 2. 평화·통일교육에는 없는 것들: ① 협력안보와 인간안보

- ▶ 평화·통일교육의 목표로 제시된 '건전한 안보의식 제고'는 국가안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국가적 방위라는 좁은 의미의 안보

“한반도에는 국제 안보환경의 변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북한의 핵문제 등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여러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국가 안보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나와 우리 가족이 영위하는 삶의 터전을 지키고 우리 사회의 자유와 번영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안보의 기초는 군사적 위협은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소들로부터 인류 보편적 가치와 민주적 제도를 지켜나가려는 **건전한 안보의식**을 갖추는 데 있다. 이러한 안보의식을 바탕으로 한 안보역량의 강화가 평화통일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방향과 관점』)

- ▶ 대북군사안보 중심의 안보의식 제고는 평화의식 함양이라는 교육 목표와 충돌
- ▶ 막대한 국방비(세계 10위!), 군비증강(세계 2위!!), 군축 문제에는 침묵
- ▶ 군 안보교육, 공직자 안보교육은 더욱 심각

☞☞ ‘한반도형 협력안보’, 인간안보 개념으로의 전환, 안보와 평화의 관계 설정 필요

※ 협력안보: 국제안보 쟁점으로 부각된 이슈를 둘러싸고 갈등관계에 있는 해당국가들 사이에서 협력적 관여를 통해 당면 안보 이슈를 풀어나가는 접근법(이수형)

### 3. 평화·통일교육에는 없는 것들: ② 적극적 평화

- ▶ 평화·통일교육은 전쟁없는 상태(전쟁억지)라는 소극적 평화 개념에 기반
  - ▶ 적극적 평화 관점에서 본 분단폭력-군사문화, 적대와 경쟁, 서열주의, 반생명문화, 서열주의, 가부장제, 인종주의, 젠더불평등을 포함한 구조적 불평등 등-에 대한 침묵
- ☞☞ 통일 필요성을 주장하기에 앞서 분단의 총체적 폭력성을 드러내는 일 필요 (김영철)
- 적대성-안보국가-보호담론-서열주의-이분법-색출심리-약자에 대한 폭력의 연결고리

## 4. 평화·통일교육에는 없는 것들: ③ 한반도 평화구축의 당사자 북한

### ▶ 북한을 이중적 존재로 인식

- “북한은 안보를 위협하는 경계 대상이면서 평화통일을 만들어 나갈 협력 상대”(『평화·통일교육의 방향과 관점』)
- ‘균형있는’ 북한관 강조

### ▶ 평화·통일교육에서 북한 실종 (정주진)

- 평화통일의 협력 상대라고 하면서도 교육 텍스트 내에서 북한의 관점과 입장은 찾아볼 수 없고 중요하지도 않음.
- 평화교육에서 당사자 배제는 폭력

### ▶ ‘균형있는’ 이해란 상대방의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나의 입장을 찾는 것

☞☞ 역지사지의 교육을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 건설의 동반자로 북한 인정

☞☞ 논쟁수업 모형 도입을 통해, 남북한간의 입장 차이와 우리 사회 내의 북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내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한 교육적 노력 필요

## 5. 평화·통일교육에는 없는 것들: ④ 인식주체인 나, 타인과의 관계

- ▶ 정부 주도의 평화·통일교육은 교육방법으로서 '학습자의 자발적 탐구와 능동적 참여'를 강조하지만 정답("통일은 필요해")이 정해져 있는 교육
- ▶ 일부 시민단체의 평화교육, 탈분단교육은 나의 답을 찾는 교육
- ▶ 평화·통일교육은 한반도라는 공동 생존의 장에서 나의 위치, 나와 북한 주민을 포함한 타인의 관계를 돌아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도록 하는 것
  -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돌아보고, 서로의 존재가 연결되어 있음에도 서로를 적대적 타자로 여기고 있는 현재의 분단체제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이는 남북한 주민들간의 동질성 공유와 차이 인정 문제, 공존과 연대 문제로 연결됨.
  - 이는 근본적으로 자신과 타자, 타자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의 문제이며, 코로나 이후 우리의 삶의 방식에 대한 반성과 연결되는 문제

## <2부 토론>

### COVID19 이후 한반도 여성평화운동의 전략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과제

최수산나 한국YWCA연합회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는 민족주의와 반세계화,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드러냈지만, 동시에 국경을 넘어서는 공동 대응과 연대, 다자 협력이라는 가치를 재확인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 운동은 코로나라는 새롭게 등장한 변수 속에서 오히려, 국내외를 아우르는 전방위적인 연대를 보여주고 있다. 연대를 통한 저변의 확장이 일면에서는 일어나고 있지만, 시민사회 내에서 한반도 평화 의제의 확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최근 여성들의 국제 평화연대는 비교적 긍정적 성과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간 문제이자 국제적 변화의 흐름이 중요한 만큼, 지속되는 팬데믹과 불확실성 시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대응할 것이 요청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연대의 괄목할만한 활동은 2015년 국제여성평화걷기운동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성들의 국제연대가 가시화되었으며, 평화구축 과정의 여성참여라는 1325의 과제를 실질적 사례로 보여주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 글로리아 스타이닝, 리마 보위, 메리어드 맥과이더 등 국제적 인지도가 있는 여성들의 군사 분계선을 넘은 발걸음과 호소력 있는 평화 연대의 목소리는 한반도를 넘어 국제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으며, 더불어 여성평화안보(WPS)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여준 계기가 되었다. 여성평화걷기는 2018년 Korea Peace Now 캠페인(이하 KPN)으로 이어졌고, 2019년 미 의회 로비활동을 통해 미 하원의원 로칸나 의원을 필두로 하는 한반도종전결의안 HR152 법안 발의와 52명의 서명 결의를 이루어냈다. 아쉽게도 이 법안은 내년 재상정과 입법화를 기대하게 되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반도 상황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 언론과 정계의 관심과 이해를 높여왔다.

여성들의 국제 평화 활동은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5월 국제민주여성연맹(Women's International Democratic Federation)은 17개 국가 여성들로 조직된 조사단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유럽, 아시아, 태평양, 아프리카, 미국 등 유엔군에 참가한 나라를 포함한 다양한 사상과 정치적 입장의 여성들은, 열이틀간의 조사결과를 담아 「한국에 있어서 미군의 잔혹 행위」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1991년 첫 남북여성들의 교류였던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는 도쿄, 평양, 서울에서 3년간 진행되었으며, 국제 여성들은 이 모임의 성사를 위한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2008년에는 6자회담에 참여하는 민간여성들의 주도로 동북아여성평화회의가 시작되었고 비록 북한여성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2012년까지 지속되며 1.5 트랙 대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한국YWCA는 1994년 연변, 1996년 뉴욕에서 한민족여성대회를 열고 디아스포라 여성들과 평화통일을 논의하였으며, 2013년 연변에서 가진 길위의평화학교에 이어, 2017년부터는 100주년까지 지속되는 'YWCA 여성평화순례 한라에서 백두까지'를 통해 한민족 디아스포라 여성들과의 만남과 연대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2011년 세계YWCA결의문을 통해 세계 각국 젊은 여성들의 DMZ 방문으로 한반도 상황을 알려왔으며, 지난해 2019년에는 한반도종전과 평화체제 구축 및 대북 유엔 제재 해소를 위한 결의문을 유례없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하여 109개국의 연대와 협력을 끌어내고 있다.

올해 국내외 380여 개의 단체들이 결합한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은 결합과정 속에서 평화운동 연대

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각자도생과 전략적 자율성의 시대가 될지 새로운 연대의 시대가 될지 예측이 난무한 시대 속에서, 후자를 향한 우리의 바람은 아직 그렇다할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 답보적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현재를 성찰하며 제안해본다.

첫째는, 한반도 평화 이슈의 주도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운동의 구심점, 즉 내발적 동기가 지속되고, 민의 평화의 서사가 담겨져야 한다. 평화와 통일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중요하다. 또한 내부의 추동력을 위한 자원의 확보, 민간 기업들의 참여, 그리고 친근함을 위한 이슈의 다른 옷 입히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를 위한 운동의 전략과 확장을 위한 프로세스에 대해 신중하게 토론해볼 때가 아닌가 싶다.

둘째, 다자화된 협력이다. 코로나19는 지리적으로 가까운 나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돌아보게 한다. 일본, 중국 등과의 오랜 동아시아 연대는 시민운동의 자산이다. 지정학적 연계성이 높은 동아시아 여성들 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 연대의 재구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주변국에 가져올 평화의 가치와 유익, 무엇보다 그 공공성을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공유함이 필요하다.

한반도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하다보니 미국 뿐만 아니라 EU 국가 단체들과의 협력이 중요시 되고 있다. 다자간 협력을 위해서는 국내 파트너 발굴 또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청년 평화 여성 리더 육성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즉, 청년 여성들을 유럽 등 파트너 기관으로 파견하는 단기 집중 프로그램을 만들고, 민간 기금을 조성하는 일이다. 여성평화기금 형성 혹은 코이카 기금 활용을 제안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국제 사회에서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성은 운동을 힘 있게 추진해나가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동력이라고 본다.

셋째, 청년 세대들과의 공감과 참여 방안이다. 2019년 9월 진행된 ‘영페미니스트, 글로리아 스타이 넘에게 묻다’ 대화모임은 젊은 여성들의 가장 큰 관심인 안전(안보)을 일상의 평화와 연결하였다. 안전(안보)은 군사적 문제에만 결부되지 않는다.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구체적인 WPS의 제를 발굴하고 청년들과 관계된 직접적 문제들에 관심을 이끌어낸다면, 젠더와 연령과 국경을 넘는 확산과 참여에 색다른 길이 트일 것이라 본다.

마지막으로, 평화의 확장이 필요하다. 평화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다. 각자 다른 평화들의 만남을 통해 공통된 평화의 지점을 만나고 확장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를 논할 때 우리만이 소유하는 안락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곁에는 한반도와 가장 유사한 상황의 국가인 팔레스타인이 있고, 분단 체제의 산물인 조선적(朝鮮籍)을 지닌 사람들 자이니치가 있다. 지구 시민 사회의 가장 아픈 곳과의 만남은 국가 기구가 아닌 민에 의한 평화로 재구성되도록 한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를 남북 상황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평화들과의 연대를 통할 때 우리의 평화 논의는 확장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이슈와 맞닿아있는 글로벌 여성 연대, 상호 지지와 지원 방안들을 통해 사회 곳곳에서 민의 평화 프로세스들이 영향력을 발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사회에 맞춰져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글로벌 팬더믹 사회 속에서 우리 운동 영역이 다시 국가 안으로 제한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심축을 다시 세워가며 G-제로시대를 활용한 다양한 축의 연대를 활용하는 때가 되리라 믿는다.